



# 세종 이슈리포트

## SEJONG ISSUE REPORT



행정수도

자족경제

문화복지

균형성장

시민참여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 SEJONG ISSUE REPORT

세종 이슈리포트

# CONTENTS

2026 창간호 | 통권 제1호

|             |              |                                               |    |
|-------------|--------------|-----------------------------------------------|----|
|             | <b>권 두 언</b> | 권영걸 세종연구원장                                    | 02 |
| <b>행정수도</b> | <b>도시환경</b>  | 국가상징구역의 관리, 「선별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                  | 04 |
|             |              | 농촌공간 법정계획 수립 대응... 광역지원체계 구축 필요               | 07 |
|             |              | 세종이 여는 충청권 메가시티 하나의 생활권 「충청권 광역교통패스」 선도 추진(안) | 09 |
|             | <b>경제사회</b>  | 성평등 정책 강화 국정 기초 대응과 시정 5기 정책기반 보완을 위한         | 11 |
|             |              | 「세종시 성별영향평가센터 분리·운영」 추진 필요                    |    |
|             |              | 성인지통계 생산체계 고도화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대응 강화       | 15 |
| <b>자족경제</b> | <b>도시환경</b>  | 세종형 모빌리티 실증성과 사업화 체계 구축 필요                    | 20 |
|             | <b>경제사회</b>  | 피지컬 AI 기업의 도시실증 혁신서비스 연계 방안                   | 22 |
|             |              |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 방안                  | 25 |
|             | <b>도시환경</b>  | 세종시, AI 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 28 |
|             | <b>경제사회</b>  | 충청광역권 AI 혁신허브 구축                              | 32 |
|             |              | 동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추진해야               | 35 |
| <b>문화복지</b> | <b>경제사회</b>  | 한글도시 세종 구현과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한글문화정책 생활화 전략」 추진  | 38 |
|             |              | 책읽고 쓰는 도시 세종                                  | 43 |
|             |              | 세종한글미술관의 목표·방향 전환                             | 46 |
|             |              |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 세종                           | 49 |
| <b>균형성장</b> | <b>도시환경</b>  | '묻는 장례'를 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이별                 | 52 |
|             |              | - 산분장 제도 도입과 미래 장례문화의 전환                      |    |
|             |              | 늘어나는 빈집, 달라지는 제도... 세종시가 준비해야 할 3가지           | 54 |
|             |              | 전의묘목 생산기반을 활용한 북부권 조경·정원산업 진흥거점 조성            | 56 |
|             | <b>경제사회</b>  |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세종형 국가 실증 도심 스마트팜」 육성 제안    | 58 |
|             | <b>도시환경</b>  | 도심형 바이오가스·열병합사업 접목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60 |
|             |              | 녹색 생활공간 확충 및 과학적 물관리 실현을 위한                   | 62 |
|             |              | 「스마트 정원도시 융합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추진                 |    |
| <b>시민참여</b> | <b>경제사회</b>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 제도와 방향 모색                 | 66 |
|             |              | 「주민선택형 읍·면·동장제 도입」 검토                         | 70 |

# 세종의 오늘, 대한민국의 내일

세종연구원장 권영걸

세종의 오늘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먼저 묻는 자리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해 설계된 세종은 이제 행정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건립,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바꾸는 도시의 일상, 기후위기와 인구구조의 전환은 모두 세종이 앞서 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종연구원은 세종의 현안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와 환경, 오가는 길과 일자리, 배우고 누리는 문화, 마시는 물과 가꾸는 땅에 이르기까지 삶의 곳곳이 우리 연구의 대상입니다. 각 분야의 현안을 깊이 분석하고, 개별 정책이 도시라는 하나의 삶터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살핍니다. 오늘을 읽고 내일을 설계하는 연구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뒷받침합니다.

『세종 이슈리포트』는 세종의 정책 현안을 시의적절하게 탐색하여 그 해법을 정책 현장에 제시하고 시민과 공유합니다. 국정 의 흐름과 세종의 현장을 잇고, 사회의 변화를 세종에 필요한 정책의제로 풀어냅니다.

창간호는 시정 5기의 비전인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에 발맞추어 다섯 갈래로 엮었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지속가능한 ‘자족경제’,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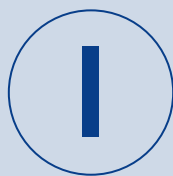
세종연구실의 연구진은 국가상징구역 조성권 광역연계,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신산업 생태계, 한글문화와 체육인재 양성, 탄소중립과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주민자치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23편의 글을 수록했습니다. 각 글은 현황 진단에 머물지 않고 세종이 내디뎌야 할 다음 걸음을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담아냈습니다.

한 해의 노력이 여무는 계절에 『세종 이슈리포트』 창간호를 선보이게 되어 감사합니다. 창간호가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연구진을 비롯한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연구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연구와 세종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이슈리포트』가 세종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세종연구원 원장 권영걸

PART



세종 이슈리포트  
통권 제1호

# 행정수도

SEJONG ISSUE REPORT

# 국가상징구역의 관리, 「선별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시민 개방과 국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보안·운영 부담이 큰 공간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방식 검토 요구

행정수도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지남석 책임연구위원 nsji@sri.re.kr

## I 이슈 제안 배경

### ❖ 국가상징구역 조성 본격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집무실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 추진되고 있음
- 국가상징구역은 국가시설과 시민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관리주체 및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위 치 : S-1생활권 내

대지 면적 : 210만 m<sup>2</sup>

공간 구성 : 시민공간, 대통령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공간 특징 : 국가중요시설 주변 대규모 부지로 구성.

광장·보행축·개방형 녹지 등 광범위한 시민공간 포함



### ❖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따른 관리부담 증가 예상

-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조성이 완료된 시설을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공공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유지·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상징구역은 보안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세종시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우리시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전략 필요

- 국회를 비롯한 대통령집무실 인접 시민공간은 시민의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대규모 집회·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임

▶ 국가상징구역은 국가시설과 시민공간이 복합된 공간으로, 관리주체 및 자원분담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II 세종시 주요 쟁점과 이슈

#### ❖ 현황 및 문제 : 「국가상징구역은 열린 공간을 지향하지만, 보안과 관리 부담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개방'과 '보안관리' 간 구조적 긴장상태 공존
  - 시민개방 : 상징성과 개방성을 강조할수록 보안 취약성 증가 가능성
  - 보안관리 : 이용 제한이 많으면, 시민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예: 정부청사 '옥상정원')
- 시 주도 관리체계 전환 시 재정·행정 부담 심화 가능성
  -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특히 시민공간 관리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 기존 일반적인 공공시설 이관방식을 따르게 될 경우, 자칫 보안 강화, 상시 인력 운영,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비용의 상당 부분이 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향후 일정계획

- 국가상징구역 후속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연계한 국가상징구역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 제안. 국가상징구역 내 일부 「특별관리구역」 지정 검토 (행복청 협의사항)

- 특별관리구역은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관리 필요성이 높은 공간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며, 현재 행복도시에는 중앙행정기관, 국립수목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국가상징구역 전체를 통제하기보다 국가중요시설 인접 공간 및 관리 필요성이 높은 일부 시민 공간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 이용은 유지하면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적용
  - (기대효과) ① 세종시 보안·운영·관리 부담 완화
  - ② 국가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시민 이용 편의 제고
- (추진방향) 특별관리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관리주체, 자원분담, 국비 지원방안 등을 행복청과 사전 협의

### ❖ 기본방향

- 행복도시건설의 정책목표 및 이념, 기본방향을 실현하고, 균형발전의 상징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
-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및 관리 권한이 조화된 공간으로 운영

### ❖ 구역지정 대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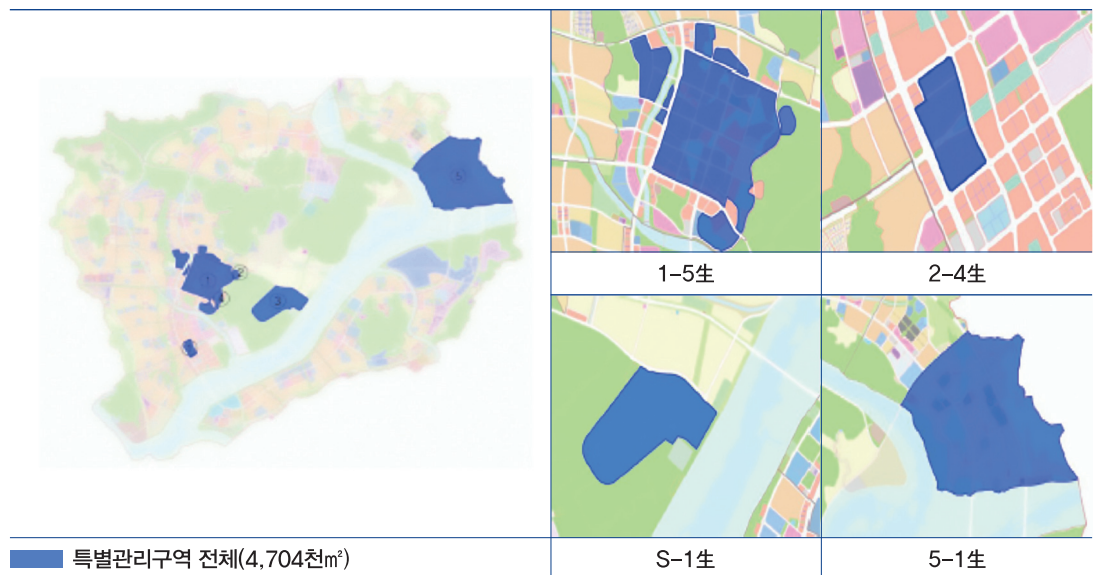
#### | 특별관리구역 지정대상 범위 |

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지정 현황

- 2026년 8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체면적의 6.4%(4,704천m<sup>2</sup>)를 지정(5개소)

#### | 특별관리구역 지정현황 |



- ① 중앙행정기관 ② 대통령기록관 ③ 국립수목원  
④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참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개발계획 변경'

# 농촌공간 법정계획 수립 대응... 광역지원체계 구축 필요

- 농촌공간 정책 ... 계획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
- 세종시, 중앙지원기관 TF 기반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추진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지남석 책임연구위원 nsji@sri.re.kr

행정수도

## I 제안 배경 및 정책 여건

### ❖ 농촌공간 관련법 제정 및 계획 의무화

-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4.03. 시행)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10년 단위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 (2026년말까지)
  - 핵심 취지 :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기반 마련
  - 수립 대상 : 읍·면 지역을 보유한 시·군 (전국 139개 대상)
    - \* 농촌공간 계획체계(3단계): '기본방침(국가) - 기본계획(시·군) - 시행계획(시·군)' 구조로 운영
    - \* 도시재생과의 차이 : 농촌 재구조화는 '농촌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 도시재생은 도시 내 '쇠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 농촌공간 기본계획                                                                                                                    | 농촌공간 시행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단위</li> <li>• 농촌 대상 장기 발전 구상 및 공간구조 설정</li> <li>•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보지 발굴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단위</li> <li>• 구체적인 실행계획 (사업 목록 포함)</li> <li>•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실질 사업 계획서 포함</li> </ul> |

### ❖ 정부 지원방식 전환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先)계획 - 후(後)지원'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 중임
  - 농촌협약 및 주요 국비사업은 지자체의 계획 수립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
  -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임

SEJONG  
ISSUE  
REPORT

- 특히 예산을 미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배포 (2026.03.27.)하고, 중앙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체계를 운영 중임

- ▶ 농촌공간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계획 기반 지원체계'로 전환 중이며, 지자체의 법정 계획 수립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II 세종시 주요 쟁점과 이슈

- ❖ 전국 지자체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세종시는 중앙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농촌공간계획 수립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의 전문지원을 받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음
    - \* 중앙지원기관별 전담지원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세종), 국립농업과학원(남양주, 통영, 거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광양, 구례, 울릉), 건축공간연구원(강릉, 양양)
- ❖ 한국농어촌공사는 「세종시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TF」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전반을 지원하고 있음
  - 운영기간 : 2026.04. ~ 2026.12.
  - 현황분석, 기본구상, 농촌특화지구 검토, 주민의견 수렴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 세종시는 중앙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농촌 협약 및 관련 정부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제안. 농촌공간계획 지원을 위한 '광역지원기관' 설치 및 협력체계 강화 필요
  - 농촌공간 정책이 계획·협약·특화지구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정부 정책 전달, 사업 대응, 정보공유 및 협의를 지원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세종시는 현재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 방식의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일반적인 광역지자체는 기초·광역지원기관 체계로 운영되나, 세종시는 단층 행정체계 특성을 고려할 때 '광역지원기관'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적절함
    - 계획 수립 지원, 농촌협약 대응, 농촌특화지구 관리,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광역지원기관 설치가 필요함
    - 중앙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변화 및 정부 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촌공간 정책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올해는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하여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향후 시행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농촌협약 등 후속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지원기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종이 여는 충청권 메가시티

## ‘하나의 생활권’

### 「충청권 광역교통패스」선도 추진(안)

- 초광역 생활권을 하나의 교통시장으로 묶는 체감형 통합 정책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ayj826@sri.re.kr

행정수도

## Ⅰ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 국토부 K-패스 시행에 따른 교통비 경감 정책 확산

- 국토부는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을 확산 중임
- 이는 교통비 지원을 전국 단위로 표준화·확대하는 흐름이며, 지역 단위 교통정책도 이러한 기조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초광역 생활권 확대와 이동 통합의 필요성

- 충청권은 통근·통학·의료·KTX·공항 이용 등 일상 이동이 행정경계를 넘어 확대되며 초광역 생활권으로 전환 중임
- 그러나 대중교통 체계는 여전히 시·도 단위 운영 구조에 기반하고 있어, 생활권 확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통합은 제한적임
- 초광역권은 단순 노선 확충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체감하는 ‘요금·환승·정산’의 통합이 핵심 과제임

### ❖ 초광역단체 출범 이후, 교통통합은 선도 과제로 부상

- 충청광역연합은 통합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일일생활권 가능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현을 목표로 교통통합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충청권 광역 이동의 결절점이자, 이음패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도시로서 초광역 교통통합 논의를 실질 설계 단계로 견인할 필요가 있음

SEJONG  
ISSUE  
REPORT

- ▶ 초광역권 활성화의 출발점은 '이동의 통합'이며, 이를 체감형으로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광역교통패스임

## II 세종시(충청권) 여건 및 분석

### ❖ 현황: 광역 이동수요는 증가하나, 제도·서비스는 분절

- 행복도시권 광역BRT 확대, 오송·공주역(KTX) 및 청주공항 등 광역 환승시설 접근 수요가 지속 확대
- 세종-대전-청주·공주 축을 중심으로 통합환승요금체계가 도입되어 광역BRT 및 일부 광역· 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함
- 다만 현 체계는 노선 중심 환승 통합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충청권 4개 시·도를 하나의 교통 시장으로 묶는 '권역 통합형 교통패스'는 부재

### ❖ 정책 환경: 충청광역연합 차원의 준비 착수(발주 예정)

- 충청광역연합은 2026년 연구용역을 통해 초광역 교통패스의 설계 및 실용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운영체계(정산·서버), 법제화, 재정분담, 연계 서비스(시외버스·광역셔틀) 까지 포함하는 통합모델을 검토 범위로 설정함
- 교통패스를 단순 '카드'가 아니라 모바일 앱·정산 서버·환급/할인 제도를 포함하는 "하나의 서비스(MaaS)"로 설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함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충청광역연합 연구용역 수주 및 선도 수행

- 세종시는 초광역 생활권의 중심축이자 이음패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도시로서, 충청광역 연합 발주 예정 연구용역을 선도적으로 수주하여 충청권 광역교통패스의 기준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 기대효과

- 충청권 초광역 생활권의 실질적 통합 기반 확보
- 광역 통행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중심 수송체계 강화
- 청주공항·오송·공주역 등 주요 환승거점 접근성 개선을 통한 산업·행정 기능 연계 강화
-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 가시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표 통합정책 성과 창출
- 세종시 관점의 효과
  - 광역BRT 중심축 도시로서 '초광역 이동 허브' 위상 강화
  - 이음패스 운영 경험을 초광역 모델로 확장하여 정책 선도도시 위상 제고
  - 통합정산 데이터 기반 교통운영 고도화로 재정 효율성 및 정책 정밀도 향상

# 성평등 정책 강화 국정 기초 대응과 시정 5기 정책기반 보완을 위한 「세종시 성별영향평가센터 분리·운영」 추진 필요

-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단계적 확대 추진을 통해 성평등 책무성 강화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광역자치단체이나, 독립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부재
- 지역사회의 성평등 정책 요구에 선제 대응 필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최성은 책임연구위원      choise@sri.re.kr

행정수도

## Ⅰ 추진 필요성

### ❖ 국정 변화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응한 성평등 정책기반 구축 필요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중추기능 집적 방향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정책 의제로 구체화되고 있음
  - 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1억)가 편성되는 등 이전 타당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기반이 마련됨(2025.11.13.)
  - 시정 5기 공약 실천계획에도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의 세종 이전 추진이 국가중추기능 완전 이전 과제로 포함되어 있음
-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세종 소재 중앙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한 부처이며, 현재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가 설치된 8개 기관 중 4개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음
  - 현재 중앙부처 중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가 설치된 곳 중 4개 부처가 세종 시에 소재함(2025년 12월 기준)
    - ▶ 세종 :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 서울 등 타지역 소재 :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
- 성평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중앙부처의 정책기능만 이전하고 이를 지역에서 실증·지원할 기반이 부족하다면 행정수도 이전의 정책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세종시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지역 정책협력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시정 5기 공약의 정책 품질관리 기반 구축 필요

- 시정 5기 124개 공약에는 돌봄, 청년,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출산·보육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정 전반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예산·집행·평가까지 지원하는 정책 품질관리 체계는 부재함
- 성별영향평가센터는 특정 성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진단·개선하는 정책 품질관리 조직으로 기능함
- 최근 지역 시민사회 역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의 시정 전반 반영, 돌봄·안전·대표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 2026.6.8., 「여성의원 늘어난 세종시의회... '성평등 정책으로 응답해야'」, 디트NEWS24.
  - ▶ 2026.6.9., 「성명서 '높은 시민참여와 여성 대표성 확대, 이제는 성평등 정책으로 응답하라!'」, 더투데이.
  - ▶ 2026.6.22., 「성평등도시 세종, 이제는 구조를 바꿀 때」, 뉴스피치.

- ▶ 국정 방향은 '중앙부처 성평등 인프라 강화 + 지역 기반 확산 구조'로 이동 중이며, 세종시는 중앙부처 밀집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 ▶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이전을 전제로 한 시설투자가 아니라,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세종시 자체 정책기반이며, 향후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지방 정책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제적 투자임

## II 세종시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세종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독립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는 전국 유일의 광역 자치단체
  - 현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를 공동 이용하고 있어, 세종시 정책 특성을 반영한 전담 지원체계가 부재
  - 2026년 위수탁 협약 종료 및 차기 운영기관 공모를 앞두고 있어, 세종시 독립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 시점 도래
- 공동 운영체계에 따른 정책지원의 양적·질적 한계
  - (정량적 측면) 최근 2년간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등 컨설팅 실적은 연평균 1,100건이며, 이 중 세종시 지원은 197건(18%) 수준으로 대전(903건, 82%)에 비해 제한적
  - (정성적 측면①)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연구, 현장 컨설팅(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이행, 성인지예·결산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행점검 등), 공무원 교육, 정책 환류 및 사후관리 등 지역 밀착형 지원에 한계
  - (정성적 측면②) 세종시의 경우 지역성평등 수준 자체는 비교적 양호하나 높은 도시 자원과 인적 역량이 여성의 고용·건강·돌봄 성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어 성평등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체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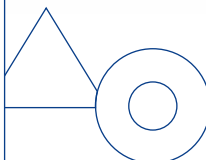
-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뒷받침할 실행기반 부족
  - 세종시는 전국 최초의 광역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는 부재
  - ▶ 반면, 대전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공동 운영 시,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실행기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지리적, 공간적, 인력양성 측면에서의 불리한 여건
- 지역 전문인력과 정책자산을 활용할 기회 상실
  - 현재 공동 운영체계에서는 세종시 중심의 정책 생태계 구축에 제약이 있음
    - ▶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의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한계
    - ▶ 지역 경력보유여성 등을 활용한 성별영향평가 전문 컨설턴트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회 부족
    - ▶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양성평등위원회 등과 연계한 정책 환류체계 미흡
    - ▶ 성인지통계 생산·관리 및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담당할 전문조직 부재
    - ▶ 시정 5기 공약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결산 지원체계 부재
- 행정수도 위상에 비해 성평등 정책지원 인프라 부족
  - 세종 소재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의 정책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한계
  - 향후, 충청광역연합과 연계한 성평등 공동정책 발굴 기반 미흡
- 대전시사회서비스원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위수탁 협약 종료 예정(3년 단위 종료). 2026년 10월경 공모 예정 → 2026년 말~이후, 세종시 독자 운영 전환 가능 시점 도래

▶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대전·세종성별영향평가센터 위수탁 협약이 2026년 종료 예정이며,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차기 운영기관 공모가 예정되어 있어 세종시 독자 운영 전환을 검토할 적기임('26.10월경)

### III 정책 제언

#### ❖ 세종시 전략 프레임: '성평등 정책 허브도시' 구축

- 시정 5기 공약의 정책 품질관리 플랫폼 구축
  - 주요 공약 대상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지원
  - 시민 체감형 성평등 정책 확산
- 성평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성평등 행정수도 구현
  -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컨설팅,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
  -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지원체계 구축
  -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력, 성평등가족부 이전 대비 정책기반 마련



- 충청권 성평등 정책 허브 육성

- (예시) 충청권 여성 고용·정착 공동 프로젝트: 세종의 지역성평등지수 지표 중 가장 취약한 지표인 고용 문제를 중심으로, 대전의 연구·교육·의료서비스 일자리, 세종의 중앙부처·공공기관·공동캠퍼스, 충남·충북의 산업단지와 전략산업을 연결한 광역 여성 인재 이동·취업·경력 유지 모델을 구축

#### ❖ 제안 1. 「세종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담 분리 설치·운영

- 대전·세종 통합 구조에서 벗어나 세종시 전담 성별영향평가센터 분리 운영 추진
  - 세종시는 5개 자치구를 포함한 중층제 행정체계를 가진 대전과 동일한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성평등가족부와 협의하여 세종시 업무량에 적합한 소규모·전문형 운영모델을 적용할 수 있음
    - ▶ 센터장은 세종연구원 등 지역 전문기관의 성평등 정책 연구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신규 조직 확대 없이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교육·컨설팅·정책환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
    - ▶ 전담인력은 최소 규모로 조정(1명). 전담인력은 최소 규모로 운영하되, 전문 컨설턴트 풀을 활용하는 유연한 운영체계 구축
    - ▶ 국비·시비 50:50 재원구조에 대응하되, 인력 및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비 부담 최소화
- (기대효과) 세종시 관내 고학력 경력보유 여성 인력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 시정 5기 세종시 정책 전반의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

#### ❖ 제안 2. 중앙부처 연계형 “국가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허브” 기능 구축

- 중앙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세종 소재) – 성평등가족부 - 세종시 협력체계 구축
  - 이미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연계를 희망한 바 있음
    - ※ 관련 과제명: [수탁과제] 보건복지부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방안 연구('25.11.30. 완료/연구책임: 최성은)
- (기대효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8개 중앙부처 외에 향후 타 부처로 추가 확대될 경우, 세종시가 선도적인 정책 지원 플랫폼 및 연구협력 거점으로 기능 가능함.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강화 및 중앙부처 협력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 강화에 기여

# 성인지통계 생산체계 고도화를 통한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대응 강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최성은 책임연구위원      choise@sri.re.kr

행정수도

## Ⅰ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 성인지통계 산출·보급의 법적 의무 강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통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 통계를 작성할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함
  - 성인지통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주요 성평등 제도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자료로 기능하고 있음
- (최근 국정 방향) 최근 중앙정부는 성인지통계를 단순 공표자료가 아닌 정책·재정 연계형 관리지표로 전환하고 있음
  -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은 개편된 국가성평등지수를 예산 편성의 직접 근거로 반영하도록 하여, 성인지통계와 재정 집행 간 정합성을 대폭 강화함
  - 특히, 2026년부터 성인지예산서 작성체계는 고용·소득·돌봄 중심 구조에서 양성평등의식, 여성폭력 등 정책 체감형 지표까지 확대되면서,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성과목표 설정과 정책 대응 역량이 더욱 중요해짐
    -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 (여성친화도시 인증 방식 변화)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과정에서 지표별 이행성과와 정책 효과성 입증을 강화하고 있음

- ▶ 국정 방향은 성인지통계를 '정책 참고자료'에서 '정책 판단과 재정 배분의 기준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세종시 역시 이에 대응한 신속한 성인지통계 생산·보급체계 정비가 필요함
- ▶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신규인증 대응을 위한 '압축적 성과 창출 전략' 추진 필요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현행 운영의 한계와 제도적 공백

- 현재 세종시는 성인지통계 구축을 위한 별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외부 공모사업 또는 일회성 과제에 의존하고 있음
  - 외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 성인지통계 구축 여부가 좌우되어, 정기적·지속적 생산체계로 정착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
  - 또한,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연구 및 연구용역 과정에서 성인지통계 반영 여부가 과제별로 상이하며, 공통 기준 및 표준 절차 부재로 인해 연구성과가 시 차원의 통계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음
  - 2023년 충청지방데이터청 공모사업을 통해 「통계로 보는 세종시 여성과 남성의 삶」을 구축한 바 있으나, 외부 자원 의존형 구조를 벗어난 상시 운영체계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 세종시 정책 여건 변화와 대응 필요
  - 세종시는 2026년 9월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신규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2단계 지정기간('22~'26)동안의 정책 성과를 '26.9월까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이에 따라 성인지통계의 정기적 산출 및 대시민 공개체계 정비가 시급함
  - 아울러 2026년 세종시 부서업무평가(BSC, 균형성과관리체계) 공통지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 강화」가 신규 반영되었으며, 성별분리통계 생산 실적 또한 하위세부지표로 포함됨. 다만 현재와 같은 BSC 기반의 부서별 실적관리 방식만으로는 성별분리통계의 안정적 생산·축적·보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단기 실적관리 수준을 넘어, 단계적인 제도화 및 생산기반 구축이 필요함

#### ※ 2026년 BSC 지표명: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 강화(2점)

- 세부지표 : 성인지적 사전검토제 실시(40%), 성별분리통계 생산(20%), 위원회 양성참여(20%), 폭력예방교육 이수(20%)
  - ▶ 성별분리통계 생산(20%): (충족요건, 택1 이상) 부서 내 사업 추진 시 성별분리통계 생산(사업 결과보고 혹은 만족도조사 시 참여자 성별 비율 기재 등), 전문연구 추진 시 성별분리통계 생산(연구용역, 정책연구에 성별분리통계 포함: 과업지시서나 과제 협의 시 성별분리통계 포함 조건 삽입), 행정통계 작성 지원

- ▶ 세종시는 성인지통계를 부서별 실적관리 수준이 아닌, 시정 전반의 정책판단을 지원하는 상시 데이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성인지통계 산출·보급의 단계적인 제도화 및 생산기반 구축 방안

- 성인지통계를 연구-생산-추적-보급이 연계되는 신속 대응형 정책데이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1단계: BSC 실적관리) 2026년 부서업무평가(BSC) 신규 공통지표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력 강화(2점)」와 연계하여, 세부지표인 '성별분리통계 생산(20%)'의 충족요건 및 작성 기준에 대한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 (2단계: 연구·용역 관리체계 개선) 인적통계 포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내 성인지통계 작성 기준 반영 및 결과 제출체계 검토
  - 성인지통계를 개별 연구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연구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는 기본 요건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안 예시①: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관리 지침(가칭)」 마련
    - 인적 통계가 포함되는 정책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시 과업지시서 단계부터 성별분리 분석 및 성인지통계 작성 기준 반영
    - 연구 종료 시 성인지통계 작성 결과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성과를 시 정책통계 자산으로 추적·관리
  - 대안 예시②: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상 성인지통계 반영 근거 마련 검토
    - 다만, 조례 개정 시 관계부서 협의 및 행정절차 등에 상당 기간 소요 가능

| 현행                                                                                                                       | 대안 예시② 개정안 예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제2조(정의) 개정안</li> </ul>                                                      | 제2조(정의)<br>1.~2. 생략<br>3. "성인지통계"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통계로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통계를 말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용역과제의 선정)</li> <li>• 제13조의2(용역과제의 재심의)</li> <li>• [안] 제13조의3 신설</li> </ul> | 제13조의3(성인지통계 반영)<br>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결과에 인적 통계가 포함되는 경우, 과업지시서에 성별 분리 분석 등 성인지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통계는 연구 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용역결과 등 공개)</li> <li>• [안] 제19조의2 신설</li> </ul>                             | 제19조의2(성인지통계 결과 제출)<br>① 인적 통계가 포함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 완료 보고서에는 성인지통계 작성 및 분석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br>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성인지통계 작성 결과를 성인지통계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조(용역 결과의 활용)</li> <li>• [안] 제20조제3항 신설</li> </ul>                            | 제20조(용역 결과의 활용)<br>③ 시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성인지통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3단계: 시 전체 연계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연구성과를 연계·활용하는 「성인지통계 패스트 트랙」 구축으로 연구-축적-보급-환류 체계 마련 추진
  - 출자·출연기관은 정책연구, 조사,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인적 통계 자료를 지속 생산하고 있으나, 기관별 기준과 제출 방식이 상이하여 성인지통계가 시 차원에서 통합·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전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관리 절차에 성인지통계 작성 기준을 공통 반영하고, 연구 종료 후 성인지통계 결과를 시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표준화된 제출·축적 체계 (패스트 트랙)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단, 인적 통계가 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 특히 연구보고서 내 성별 분리 통계와 성별 격차 분석 결과를 표준 양식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하여, 기관별 산발적 연구성과를 시 차원의 통합 성인지통계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평가에 성인지통계 반영·제출 실적을 연계함으로써, 통계 생산-제출-활용이 연계되는 상시 운영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성인지통계 생산을 단순 권고가 아닌, 연구-축적-보급-환류가 연계되는 시정 공통 데이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음

#### ❖ 기대효과

- 여성친화도시 인증 대응력 강화와 기관별 연구성과의 데이터 자산화를 통해 성평등 정책 실행력 및 국정과제 대응력 제고 기대

PART



세종 이슈리포트  
통권 제11호

# 자족경제

SEJONG ISSUE REPORT

# 세종형 모빌리티 실증성과 사업화 체계 구축 필요

- 실증(Test-bed)을 넘어 사업화(Business)로의 전환

자족경제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안용준 책임연구위원 ayj826@sri.re.kr

## I 제안 배경 및 정책 동향

### ❖ 실증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기술의 실증을 넘어 사업화와 공공조달 연계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는 「테스트베드서울 2.0」을 통해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도시 전역을 실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실증 완료 후 공공조달과 해외 진출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스마트도시, 자율주행, AI, 데이터 기반 도시서비스 등 실증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실증성과 확산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도시 실증정책의 핵심은 '성과 확산'

- 과거 실증사업은 기술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증 이후 실제 도입, 기업 성장, 공공조달, 타 지역 확산 여부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자체도 단순히 실증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검증과 시장진입을 연결하는 도시형 실증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 ❖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 기반 보유

-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BRT, DRT, 이음패스 등 다양한 미래 교통서비스를 실증하고 있음
- 특히 도시 규모가 적정하고 신도시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자율주행, AI 교통관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스마트 주차, 교통안전 기술 등을 실증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라 교통운영, 안전관리, 시민편의 분야의 혁신기술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실증 이후 확산 체계는 보완 필요

- 세종시는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증성과가 사업화, 공공조달, 타 지자체 확산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 실증기업 입장에서도 세종시에서 기술을 검증한 이후 성능확인, 조달 등록, 후속 국비사업 연계로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기업 유치 효과는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세종시는 '실증을 많이 하는 도시'에서 '실증성과를 사업화하는 도시'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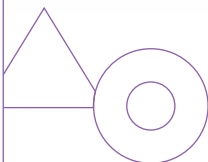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세종형 모빌리티 실증성과 사업화 체계 구축 검토

- 자율주행 구간, BRT 정류장, 환승시설, 공영주차장, 국가시범도시, 주요 교통거점 등을 실증 가능 자산으로 목록화
- 교통·모빌리티 분야 우선 실증과제 발굴 (예시)
  - 자율주행 셔틀 및 로봇배송
  - AI 기반 교통신호 및 교통관제
  - DRT 수요예측 및 배차 고도화
  - PM 안전관리 및 무단방치 관리
  - 스마트 주차 및 주차공유 서비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세종시, 행복청, LH,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실증지원 협력체계 구축 검토
- 실증 결과를 성능평가, 시민체감도 조사, 혁신제품 등록, 공공조달, 국토부·과기부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후속지원 절차 마련

#### ❖ 기대효과

- ① 실증 중심 도시에서 사업화 중심 도시로 전환
- ②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기업 유치 및 지역 혁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 ③ 국비사업, 공공조달, 민간투자 연계 가능성 확대
- ④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성과 확산 및 정책 파급력 제고
- ⑤ 행정수도 세종에 적합한 미래형 도시운영 모델 구축



# 피지컬 AI 기업의 도시실증 혁신서비스 연계 방안

- 세종시-피지컬 AI 앵커기업(레인보우로보틱스) 소통채널 구축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연계 분야 선정 검토
- AI 기반 도시실증 국가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위한 체계 마련

자족경제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남영식 책임연구위원   toju11@sri.re.kr

## Ⅰ 이슈 검토 배경

###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AI 특화 시범도시, 그리고 피지컬 AI

- 세종 5-1 생활권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 및 쇼핑, 생활과 안전의 7대 혁신요소 구현에 최적화된 국가시범도시로, 데이터 기반 통합도시 운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통해 교통·안전 등 분야별 AI를 도시공간에서 실증하기 위한 AI 인프라, 데이터, 규제특례 기반 시범도시 조성에 착수하였고, 별도로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을 통해 교통·물류, 에너지·환경 등 시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AI 기술·서비스 실증도 지원하고 있음
- 글로벌 AI 산업 흐름에서도 최근 피지컬 AI가 차세대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 엔비디아(NVIDIA)는 최근 공식발표 및 CEO 발언 등을 통해 생성형 AI 이후, 에이전틱 AI 및 로봇 등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피지컬 AI는 도시 공간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의 핵심 매개체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음

## II 혁신서비스와 피지컬 AI 기업 전략적 연계 필요

### ❖ 피지컬 AI 관점에서의 세종시 강점

- 세종시는 피지컬 AI를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라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임
  - 스마트시티에서 제공될 혁신서비스(7대 혁신요소 관련 서비스 의미) 중 모빌리티·생활과 안전·문화 및 쇼핑 등 분야에서 피지컬 AI 연계 가능성이 높음

### ❖ 피지컬 AI 관점에서의 세종시 약점

- 피지컬 AI 산업생태계의 주체인 기업 집적이 타 광역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함

### ❖ 보완 방향

- 세종시 관내 피지컬 AI 기업 중 앵커기업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업이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이후 관련 분야 혁신서비스 실증에 참여하면서, 이를 지역산업 육성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연계가 필요함
  - (1단계)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이후 혁신서비스 실증 참여
  - (2단계) 실증과 연계된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산업생태계 조성

### ❖ 세종시 피지컬 AI 앵커기업으로서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가능성

-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세종테크밸리에 세종 신사옥 준공 및 이전(2026년 3월 28일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본사 기능 이전 및 생산시설 확대 계획도 거론되고 있어 세종시 내 실질적 거점 형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모바일 로봇, 사족보행 로봇 등 다양한 로봇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
  - 사족보행 로봇(RBQ 시리즈)은 감시·정찰·수색 임무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고, 라이다·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할 수 있으며, 방범순찰·안전검사·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어 세종 스마트시티의 혁신서비스 중 로봇 기반 AI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 실증에 참여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시 실증에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해 탑재가 필요한 응용 SW 기업까지 포함한 세종시 피지컬 AI 지역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유력한 앵커 기업 후보로 간주할 수 있음

## III 피지컬 AI 기업의 혁신서비스 연계 방안

### ❖ (제안 1) 세종시-피지컬 AI 앵커기업 소통채널 구축

- 피지컬 AI 앵커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생산시설이 포함된 세종 신사옥에 2026년 3월 28일 이전 예정임
  - 해당 기업의 준공·입주 전후에 초점을 맞추어 선제적 협력채널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세종시, 레인보우로보틱스, 관련 SW기업, 기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피지컬 AI 실증 TF'를 구성해 ①실증수요 발굴, ②규제특례 검토, ③실증공모 대응, ④후속 투자유치 까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 (제안 2) 스마트시티 혁신벤처스타트업존(M존) 중심의 연계 방안 검토

- 스마트시티 인프라 중 혁신벤처스타트업존(M존) 중심의 도시 실증 혁신서비스와 앵커기업(레인보우로보틱스) 간 연계 방안 검토가 필요함
- M존에서 계획 중인 로봇전용 WAY 등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인배송·스마트 픽업(자율주행셔틀 연계 라스트마일 로봇), 안전순찰 서비스(공공시설 점검·순찰 로봇)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제안 3) AI 기반 도시실증 국가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위한 체계 마련

-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등의 AI 기반 도시 실증과 관련된 국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차별화된 세종형 피지컬 AI 실증모델을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와 앵커기업(레인보우로보틱스)간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준비를 통해 앵커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모델이 제안될 수 있다면 세종시 입장에서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IV 기대효과

- 세종시가 관내 피지컬 AI 앵커기업과 초기단계부터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투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스마트시티에서 제공될 혁신서비스에 관내 우수한 기업이 제공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이와 함께 향후 AI 기반 도시실증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차별화된 세종형 실증모델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 방안

- 스마트시티의 AI시티 전환을 위해 도시데이터 AI 활용성 제고 필요
-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사전점검 체계 마련 제안
- 시민체감형 AI 서비스 실증 위한 우선분야·데이터 요건 검토 제안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남영식 책임연구위원   toju11@sri.re.kr

자족경제

## I 이슈 검토 배경

### ❖ 세종 스마트시티의 AI시티 전환을 위한 선결과제

-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현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인프라를 조성 중이며, 해당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행정, 교통,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 중앙정부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고도화 방향으로 AI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국토교통부는 2026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를 AI 특화 시범 도시로 선정함
  - AI 특화 시범도시는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시 전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AI가 학습·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AI시티 선도모델임
- 이를 통해 AI시티 구현의 핵심 기반은 도시데이터를 AI 분석·예측·서비스 실증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구축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가 AI시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그러므로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를 'AI 친화적인 형태(AI-Ready)'의 도시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하고자 함

## II AI-Ready 도시데이터 개념·특성 및 품질관리

### ❖ 중앙정부 계획에서 제시된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 및 품질관리 전환

- 「제5차(’26~’28)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안)」(관계부처 합동, 2026.1.)에 제시된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
  - (개념) AI 학습·분석·추론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
  - (기준) AI 검색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형태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함
    - ▶ (검색 기준) AI가 찾을 때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포맷·속성정보 제공
    - ▶ (활용 기준) AI가 학습에 활용하기 좋도록 적정 품질 확보 및 표준화 구현
- AI-Ready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환
  - (관리체계 마련) 공공데이터 활용을 AI 친화적 형태(AI-Ready)로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적용 등 추진
  - (품질·표준 관리 실효성 제고) 공공데이터의 품질인증 및 표준화를 통해, AI 학습 및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실효성 제고
  - (활용성 진단) 개방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진단’을 의무화하고, AI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 AI-Ready 도시데이터 개념 및 특성

- AI-Ready 도시데이터는 중앙정부의 AI-Ready 공공데이터 개념을 세종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에 적용한 것임
  - AI 서비스 실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표준, 형식·설명정보, 연계성, 접근·규제 대응체계를 갖춘 데이터를 의미함

| 구 분     | 일반 도시데이터 특성                   | AI-Ready 도시데이터 특성                        |
|---------|-------------------------------|------------------------------------------|
| 활용목적    | - 도시 운영·관리와 현황 파악 중심          | - AI 분석·예측·최적화·서비스 실증 중심                 |
| 품질·표준   | - 부서·시스템별 기준 상이<br>- 품질 편차 가능 | - 결측·오류 최소화<br>- 표준코드·공간·시간 기준 정합성 확보    |
| 형식·설명정보 | - 파일·DB 형식 혼재<br>- 설명정보 부족 가능 | - 기계판독 가능한 형식<br>- 풍부한 메타데이터 제공          |
| 연계성     | - 개별 서비스·부서 단위 분절 관리          | - 교통·상권·시민참여 등 데이터 간 결합·분석 가능            |
| 접근·규제   | - 내부 활용 또는 제한적 공유 중심          | - 접근절차, 개인정보·위치정보 검토<br>- 안전한 활용방식 사전 마련 |

### III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제고 방안

#### ❖ (제안 1) 스마트시티 도시데이터의 AI 활용성 사전점검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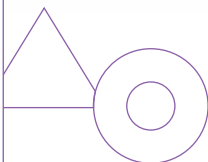
- 세종 스마트시티가 AI시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현재 구축 중인 데이터 인프라에서 향후 생성될 도시데이터가 AI 분석·예측·서비스 실증에 활용 가능한 구조인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별도 대규모 AI 데이터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기보다,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인프라의 데이터 생성·관리·연계 구조를 AI 활용성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식이 현실적임
  - 이를 위해 5대 항목(활용목적, 품질·표준, 형식·설명정보, 연계성, 접근·규제)을 중심으로 AI 활용성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생성될 도시데이터가 AI-Ready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의 점검·보완이 필요함

#### ❖ (제안 2) 시민체감형 AI 서비스 실증 위한 우선분야 및 데이터 요건 검토

- 모든 도시데이터를 일괄적으로 AI-Ready 형태로 전환하기보다, 시민체감도와 정책연계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 선정하고 향후 필요한 데이터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선분야 검토) 세종시 시정 방향 및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교통·상권·시민 참여 분야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안함
  - (교통) 이동수요·노선·수요응답형교통(DRT) 데이터
    - ▶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데이터 요건(공간·시간 단위 및 갱신주기 등) 검토
  - (상권) 유동인구·소바·공실 데이터
    - ▶ 상권 활성화 정책을 위한 데이터 요건(지역단위 및 갱신주기 등) 검토
  - (시민참여) 민원·제안·생활불편 데이터
    - ▶ 시민의견 기반 정책 환류를 위한 데이터 요건(분류체계 등) 검토

### IV 기대효과

-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인프라의 AI 활용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향후 운영과정에서 생성될 도시데이터가 AI 분석·예측·최적화 및 서비스 실증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시민체감형 우선 분야(교통·상권·시민참여)의 필요 데이터 요건 검토를 통해, 도시데이터 기반 AI 서비스 실증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세종시, AI 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자족경제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송양호 책임연구위원 ysong@sri.re.kr

## I 제안 배경 및 시사점

### ❖ 국가 물산업 정책 및 세종시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 기후부는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24~'28)」을 통해 물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디지털·녹색 물기술 구현 및 지역 실증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
  -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확대, 지자체 단위 실증시설 구축 지원('25년)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기업 컨설팅·해외진출·기술개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現 정부 핵심 국정과제와의 전략적 연계점 발굴을 통한 세종시 특화 모델 제시 필요
  - (AI 국가전략 연계) 스마트 관망관리, 수질예측 AI 등 물산업 분야 AI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연계) 영세 물기업(1~9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 세종시의 전략적 위치와 조례 제정의 시급성

-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고려대 세종캠퍼스·K-water 등 핵심 인프라를 보유, '정부-대학-기업' 물산업 트라이앵글 모델 구축 최적지
- 세종시는 조례 미제정으로 타 광역시·도(9개 제정) 대비 다소 뒤쳐진 상황으로 선제적 조례 제정과 차별화된 시행계획 수립 시급
  - 현재 서울, 경기, 충남, 대구, 경북, 대전, 부산, 광주, 제주만 조례 제정 완료

- ▶ 정부·대학·기업 트라이앵글 모델 구축으로 세종시가 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고, 영세 물기업의 디지털 전환·AI 실증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 및 지원 기반이 필요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조례·지원체계 부재-제도적 기반 전무

- 현행 세종시에는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독립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불가
  - 물산업 기업 데이터베이스 미구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맞춤형 지원 불가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육성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 부재
  - 타 지자체는 실증화 시설·집적단지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 ❖ 영세한 산업구조 및 청년 인재 유출

- '22년 기준 세종시 물산업 사업체 1,403개소 중 1~9인 소규모 기업이 86.6%(1,215개소) 차지
  - 매출 상위: 50인 이상(10,005억원, 27개소), 20~49인(9,933억원, 65개소)
  - 건설업(39.0%)·시설운영·청소업(30.4%) 위주로 고부가가치 물기술 기업 부족
-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교육기관 보유에도 물산업 전문 교육과정 미흡,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심화
  - 지역 내 물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부재

[표 1] 세종시 물산업 진단 매트릭스

| 평가요소    | 현황 진단                 | 시급성   |
|---------|-----------------------|-------|
| 산업구조    | 1~9인 기업 86.6%, 영세성 심각 | ★★★★★ |
| 제도기반    | 조례 미제정, 지원센터 부재       | ★★★★★ |
| 인재양성    | 전문교육 과정 부재, 청년 유출     | ★★★★☆ |
| 실증화 인프라 | 테스트베드 부재, R&D 한계      | ★★★★☆ |
| 정부 연계성  | 세종청사 입지, 정책 접근성 높음    | ★★★★★ |

1. 송양호, 김성표, 안용준(2024), 세종시 물산업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대전세종연구원.
2. 송양호, 김성표, 남영식(2025), 세종시 물산업 생태계 비전 마련, 세종연구원.

## III 추진전략 및 과제

핵심 기초 : 조례 제정 → 시행계획 수립 → 물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체계화

**목표** 세종형 물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성장 도모

**전략** 조례 제정(법적 근거) → 시행계획 수립(실행 로드맵)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지원체계 구축)

## ❖ 단계별 추진 전략

| 단 계            | 추진 내용                                                                                               | 기대 효과                              |
|----------------|-----------------------------------------------------------------------------------------------------|------------------------------------|
| 1단계<br>(2026)  |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br>- 물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br>-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확보<br>- 물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근거 신설                | 법적·제도적 기반 완비<br>타 지자체 격차 해소        |
| 2단계<br>(2027)  |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br>- 세종시 물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br>- 5개년 물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br>- 기업 지원 우선순위 및 재원 계획 마련          | 과학적 근거 기반<br>맞춤형 정책 설계 가능          |
| 3단계<br>(2028~)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br>- 기업 컨설팅·기술개발·해외진출 원스톱 지원<br>- 물산업 청년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br>- 실증시설 구축을 통한 기술검증 기반 마련 | 지역 물기업 경쟁력 강화<br>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유치 |

### ①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목적) 물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시의 책무·지원 체계 규정
- (지원대상) 세종시 내 물산업 영위 기업, 창업기업, 대학·연구기관
- (주요내용)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물산업 육성협의회 구성,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재원 마련 근거 명시
- (기대효과) 법적 근거 확보로 안정적·지속적 기업 지원 가능, 타 지자체 제도적 격차 해소

### ② 세종시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 수립

- (물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전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매출액, 기술수준, 애로사항 등 종합 파악으로 맞춤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기반 마련
- (단계별 육성 목표 및 재원 계획 수립) 국비·지방비·민간투자 연계 방안 마련, 특히 행복 도시특별법 등 특례를 활용한 국비 확보 전략 수립
  - 필요시 세종시 특화기금 조성 검토(예: 상수도 사용료 1%+하수도 사용료 1%, 연 약 5억원 수준의 물산업육성기금)

### ③ (가칭) 세종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기업 지원) 기술개발, 인증 획득, 해외진출,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 (인재 양성) 고려대 세종캠퍼스 등 연계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 (창업 지원) 물산업 청년창업 지원금, 보육공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전환) 영세 물기업(1~9인) 대상 AI·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관망관리·수질예측 AI 등 물산업 특화 디지털 기술 실증 지원
  - ※ 기존 市 기업·창업 지원사업, 청년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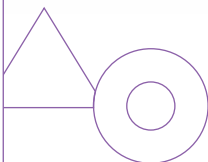
#### ❖ 기대효과

- (정량적) 물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업 컨설팅·R&D·해외진출 지원 가능
  -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기술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 (정성적) 전국 유일 '정부-대학-기업' 물산업 트라이앵글 모델 구현, 세종시 물산업 혁신 거점 위상 확립
  - 영세 물기업의 디지털 전환·AI 실증 지원으로 지역 물산업 생태계 고도화
  - 세종시 브랜드를 'AI 행정혁신 선도도시'이자 '청년 물산업 혁신도시'로 강화

## IV 정책제언

- (국비 사업 발굴) 기후부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통한 국비 매칭 사업 발굴
  - 세종시 재정여건의 한계를 고려, 특별법 특례 조항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가용 자원 최대화
-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고려대 세종캠퍼스, 정부세종청사 유관 부처 및 세종시, 지역 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조성
  - 기후부 도보 10분 거리 세종청사 입지를 활용, 정책 피드백 실시간 수렴 및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물산업 분야 창업·청년 지원 및 기업지원(AI·디지털전환)을 위한 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지원체계 정비
  - 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희망내일센터 등 기존 사업 연계

▶ 세종시가 물산업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출발점으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완비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핵심



## 충청광역권 AI 혁신허브 구축

자족경제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천영준 책임연구위원 chyj12241@sri.re.kr

### Ⅰ 제안 배경 및 시사점

#### ❖ 현황 및 배경

- (AI 지역격차 해소 필요) 충청권은 국가 과학기술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공 AI 플랫폼·서비스 인프라가 부족

\* (해남·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과학기술AI연구소, AGI연구소 유치 (서울·경기) 자체 AI데이터센터 구축

- (문제점) 4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 기업의 데이터가 다양하게 생성·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 AI 인프라는 부재

\* 충청권은 세종(중앙부처·국책연구단지, 바이오헬스기업), 대전(KAIST·이공계 국책연구원), 충남(아산·천안 등의 반도체 기업), 충북(오송·오창의 과학·의료 연구기관 및 첨단 기업)에 걸쳐 다양한 데이터 생성 기관이 위치

- 우수한 전력자급률('25 기준, 99~103%), AI 유관시설(각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반도체 공급망(SK하이닉스, 삼성) 등 조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거점 역할을 할 만한 기반 부족

- (초광역 단위 AI 서비스)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데이터, 제조데이터(천안·아산) 및 바이오·임상 데이터, 스마트시티 데이터, 농업용 사물인터넷 데이터 등 다양한 버티컬 데이터를 정제·가공·유통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 버티컬 데이터는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되어 수집·정제된 데이터를 뜻함

- ▶ GPU·NPU·AIDC 등 AI 자원을 충청권이 공동으로 확보하여 컴퓨팅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글로벌 데이터 산업의 핵심 플랫폼이 될 기반 조성 필요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기존 관련 사업

- (피지컬 AI 특화 클러스터) 충청권 중 세종은 국내 최대 민간 AI 특화 데이터센터('23년 건립, GAK 세종)을 보유하고 있고, 피지컬AI 학습·추론 분야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하고 있음
  - 네이버는 엔비디아의 GPU(약 6만 개)를 확보해 세종시 2·3단계 증설 과정에 집중 활용할 계획임
    - \* GAK 세종에는 엔비디아 A100 텐서코어(GPU 2,240개)로 구성된 '슈퍼컴퓨터 세종'이 완비되어 있고, 피지컬 AI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 담당
  - 세종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LH는 세종 5-1생활권(합강동 일대)에 로봇친화형 AI시터를 구축하고 로봇의 실제 작업 및 구동이 원활한 피지컬 AI 환경 구현 계획
    - \* 물류·모빌리티 혁신(Seamless Last-mile), 디지털 트윈 기술 등 적용
-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융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다양한 실제 데이터와 연계한 시나리오 기반 교통 예측 기술 개발 추진(총 68억 2,500만원 규모)
  - \* 수요처: 세종·대전·서울, 기술개발: KAIST·한국교통연구원 외 3개기관

### ❖ 제도적 근거

- (법령) 「인공지능기본법」 15조(학습데이터 관련 시책 수립)
  - 정부는 학습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촉진 위해 시책수립
    - \* 정부의 다양한 데이터 제작 및 생산과 관련된 지원, 학습데이터의 통합 제공·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준 제시
- (정책) 「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국가AI전략위원회)」 등
  - AI를 통한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AI 3대 강국'으로 서의 비전 선포
  - 「범정부 AI 공통기반」('25.11)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부망에서 민간의 최신 AI모델, 학습데이터, GPU 공동이용 발표
  - 역대 최대 AI 예산편성('26년 9.9조원)과 함께 ①AI혁신생태계, ②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③글로벌 AI기본사회 3대 축 설정

### ❖ 추진 방향

- (초저지연 추론용 AI 인프라 구현) 수도권 거점을 지나지 않는 충청권 전용 초광역 IX(인터넷교환거점)을 조성해 자율주행·재난안전·치안·피지컬AI 분야 등에서 초저지연 환경을 구현

- (에너지자립형 고밀도 AI DC 생태계) 세종의 높은 전력자급률(99~103%)과 충남의 풍부한 발전자원을 연계해 송전 손실 없고 경제성이 높은 고밀도 AI DC를 구현
  - ※ 분산에너지법 기반의 차등요금제로 수도권 대비 DC 운영비 20%절감
- (지역특화형 버티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R&D 데이터(대전), 행정 데이터(세종), 제조 데이터(충남·충북)에서 추출된 대용량 파라미터를 효과적으로 학습시킨 충청권 전용 파운데이션 모델(sLLM)을 개발해 AX 가속화 및 산업 체질 개선
  - ※ 해당 파운데이션 모델은 정부·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소재 중소기업 등이 API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지역 제조·서비스 업체의 AI수용도를 전국 최고로 향상
- (AI·반도체 분야 R&D 허브 구축) 충청권 초광역 AI DC를 수요처로 하고,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허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 유치
  - ※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출연하는 한국형 IMEC 등의 세종 유치 검토

### III 정책제언

- (국비 지원 유치)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지원체계를 활용한 충청광역권 AI 인프라 및 버티컬 AI(sLLM) 개발 방안 수립
  - AI 인프라(AIDC)는 정부 예산 외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기반 조성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관내 대학 및 세종시 지원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대학·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산학융합지구 결성을 위한 기반 조성
  - 산학융합지구 조성 및 지역산학융합원 유치를 위한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수시 협력

# 동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추진해야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과 앵커스토어 중심의 상권을 전국적 확산을 추진
-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추진 검토 필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김성표 책임연구위원      spkim@sri.re.kr

자족경제

## I 국정 동향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국정과제 61)'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청년·상권 주도 성장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로컬 혁신창업가 육성 △앵커스토어 중심 상권 전국 확산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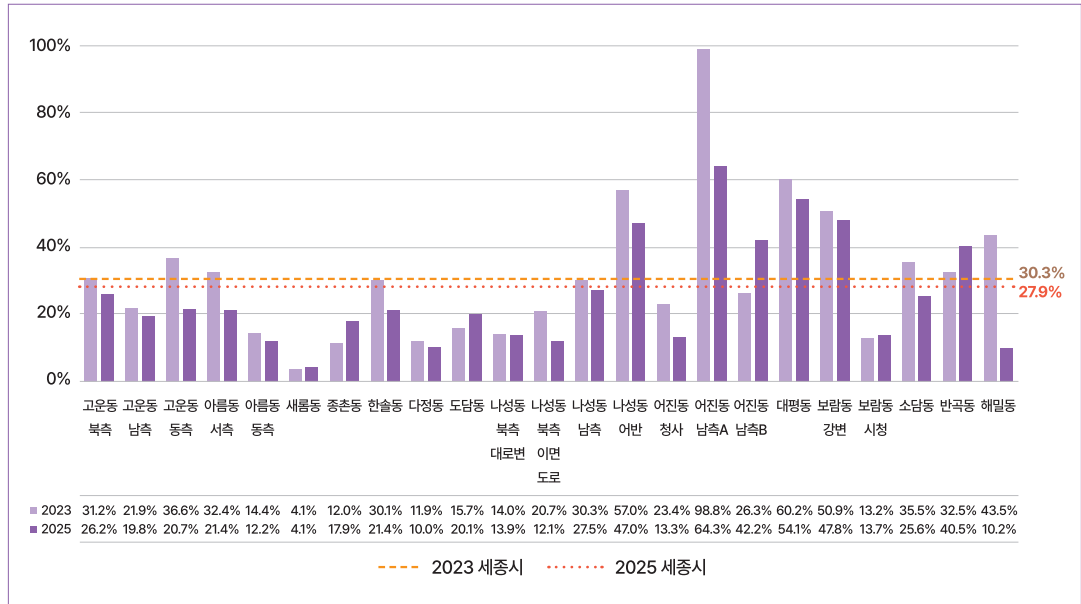
- 로컬 혁신창업가 육성
  -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 발굴 →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육성
  - '로컬 창업타운'을 통하여 교류·협업·정보공유 등 지원
- 앵커스토어 중심 상권 전국 확산
  - (범부처) K-컬처·인바운드 관광 등 결합 → 전국에 글로벌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 조성 (범부처 협업 상권육성 프로젝트, ~'30)
  - (민관협력) 조례제정과 상생협약을 확산하고, 상권 내 소상공인 간 조직화 및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50곳, 1곳당 5억원)

▶ 국정 방향은 '로컬 창업 + 글로벌 상권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로컬 창업과 상권 육성을 위한 잠재력을 보유

## II 세종시 여건

### ❖ 현황 및 문제

- 세종시 동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 발생



## III 해결방안, 활용방안, 개선방안, 세부계획

### ❖ (제안)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추진

- 지원 분야 및 내용
  - (사업목적)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공간·콘텐츠를 결합하여 글로벌 상권 구축
  - (지원대상) 로컬크리에이터 등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과 지자체의 컨소시엄
  - (지원내용) 글로벌 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 최대 55억원(매칭융자 30억원 포함)
  - (지원자격) 로컬크리에이터 대표기업, 소상공인 2개사 이상, 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

## IV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는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 중요
-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 추진을 통해 상권 기획 및 지역청년 교육 등 골목상권의 브랜드화, 동네상권 문제 해결 및 상권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PART



세종 이슈리포트  
통권 제1호

# 문화복지

SEJONG ISSUE REPORT

# 한글도시 세종 구현과 시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한글문화정책 생활화 전략」 추진

- 세종시는 기존 한글문화자산과 생활권 정책을 연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한글을 보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정책 전환 필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이재민 책임연구위원   culture@sri.re.kr

## ❶ 국정 및 시정 동향과 제안 배경

### ❖ 정부, 지역 고유 문화자산 활용 및 생활권 중심 문화정책 추진

-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발전 강조
  -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생활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마련 필요
  - 문화자산의 보존을 넘어 지역 정체성, 도시브랜드, 정책 경쟁력과 연계하는 활용 기조 강화
-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조성 및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확대 기조 강화
  - 시민이 일상 속에서 접근 가능한 생활권 중심 문화거점 조성 중요성 증대
  -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감형 문화정책 확대 요구
- 지역문화의 산업·관광·교육 연계 필요성 증대
  - 지역문화자산의 산업화, 관광자원화, 교육콘텐츠화 등 융복합 활용 확대
  - 문화정책을 지역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제고를 함께 이끄는 전략으로 보는 관점 강화

### ❖ 세종시, 한글 기반 도시 정체성 구현을 통한 국가정체성 정립의 기대

- 세종시는 도시 명칭 자체가 세종대왕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한글을 도시 정체성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상징성 및 명분과 함께 국책 사업 추진 중
  - 아울러 세종시는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한글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과 문화정책을 구체화할 제도적 기반도 확보
- 한글도시 정책은 상징적 선언이나 개별 행사에 머물기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정책으로 확장 필요

- 한글정책은 특정 시설이나 기념행사에 한정하기보다 도시공간, 문화경관, 생활문화, 관광, 교육, 산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 필요
- 특히 한글을 활용한 세종시의 정체성 구현은 단순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 한글을 활용한 문화 거점 구상과 시민 체감형 정책의 연계 필요

-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 비전과 국립 한글문화단지, 한글산업클러스터 구상 등을 통해 한글 중심도시 조성 여건을 갖추고 있음
  - 다만 한글도시 정책의 실효성은 대형 거점 조성 자체보다 시민이 이를 일상 속에서 얼마나 인식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시민 체감형 정책은 단순 보완사업이 아니라 대형 거점사업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도시브랜드를 생활문화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임

▶ 국정 방향은 지역 고유 문화자산 활용과 생활권 문화거점 조성이며, 세종시는 한글을 도시 정체성 자원으로 활용할 여건을 갖춘 만큼 시민 체감형 한글도시 정책 추진 필요

## II 세종시 한글도시 추진 및 한글문화단지 구상 현황

#### ❖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 추진

- 세종시는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 추진(2025년~2027년)
  - 국제 한글 비엔날레, 한글시민예술가 양성,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 등 이음 사업 추진
  - 한글날, 세종대왕 나신날 행사 등 채움 사업 추진
  - 한글사랑 어린이 아카데미, 한글 놀이터 조성 등 가꿈 사업 추진

#### ❖ 국립 한글문화단지 및 한글산업클러스터 구상

- 세종시 한글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랜드마크로서 국립 한글문화단지와 같은 복합문화 공간 필요성 제기
  - 한글문화의 글로벌 거점 도약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 관련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반영, 세종시와 행복청 간 실무협의 진행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에 한글산업클러스터 내용 포함
  - 한글의 국제화·산업화·문화관광 연계를 위한 국가 차원의 거점 구상 구체화

#### ❖ 기존 한글문화자산 기반 축적

- 조치원 한글놀이터, 나성동 한글상점, 한글사랑거리, 이응다리 등 한글 관련 공간과 상징 자산 조성
  - 체험·교육, 생활문화·소비, 거리경관, 도시상징 등 기능별 자산 분포
  - 시민이 일상에서 한글을 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자산으로 활용 가능

### ❖ 세종시 한글정책의 현안 과제

- 기존 자산이 개별 공간이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경향 존재
  - 시민이 이를 세종시 전체의 한글도시 전략으로 통합 인식하고 체감하는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음
  - 자산 간 연계, 공통 메시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완 필요
  - 대형 거점 구상과 생활권 기반 정책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실행전략 필요

▶ 세종시는 한글문화도시 사업, 국립 한글문화단지, 한글산업클러스터, 기존 한글문화자산 등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와 자산 간 연계성 제고는 여전히 과제

## III 주요 쟁점

### ❖ 한글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구상과 시민 일상 간 체감 간극

- 세종시는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과 국립 한글문화단지 구상 등을 통해 한글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다만 이러한 대형 구상이 시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립 한글문화단지는 한글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물리적 기반이 될 수 있으나, 시민 체감형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상징적 조성에 머물 가능성 존재추진
- 한글도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형 거점 구상과 생활권 기반 정책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실행전략 필요

### ❖ 국가상징구역 내 한글 거점의 문화단지 개념 재정립 필요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에는 '한글산업클러스터'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 중심 표현은 한글의 문화성·공공성·상징성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한계
  - 세종시가 지향하는 한글 관련 거점은 단순 산업 기능을 넘어 교육, 체험, 전시, 관광, 연구, 콘텐츠를 포괄하는 복합 공간으로 접근할 필요
- 이에 따라 국가상징구역 내 한글 거점은 '한글산업클러스터'보다 '국립 한글문화단지' 또는 '한글문화단지' 개념으로 일원화·재정립할 필요
  - 이는 한글을 산업 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자산이자 공공자산으로 위치 짓는 방향이며, 국가상징구역의 상징성과도 부합

### ❖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출구전략 필요

- 세종시는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한글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정체성과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이후에는 국비 중심의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 존재
  -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한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이 단년도 또는 한시적 사업에 머무르지 않도록 중장기 정책체계로 전환할 필요
- 특히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 기존 한글문화자산 연계, 시민 체감형 생활권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구전략 마련 필요
  -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종형 한글문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 사업, 공간, 브랜드 차원의 후속 구조 설계 필요

#### ❖ 기존 자산 연계 및 경험 설계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조치원 한글놀이터, 나성동 한글상점, 한글사랑거리, 이응다리 등 기존 한글문화자산은 체험·교육, 생활문화·소비, 거리경관, 도시상징 기능을 각각 보유
  - 그러나 현재는 개별 공간 및 사업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세종시 전체의 한글도시 전략 속에서 통합적으로 체감되는 수준은 아직 제한적
- 한글도시 정책은 시설 조성이나 상징경관 확충만으로는 시민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시민이 한글을 일상 속에서 보고, 걷고, 소비하고, 체험하고, 기억하는 경험이 반복될 때 도시 정체성으로 정착 가능
  - 따라서 기존 자산 간 연계 프로그램, 공통 홍보, 통합 동선,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하고, 공간 조성 중심에서 생활 속 경험 설계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세종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중심의 한글 거점 구상과 기존 한글문화자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시민 체감도와 자산 간 연계성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아울러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도 함께 필요

## Ⅳ 한글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안

#### ❖ 한글문화단지 정책 개념 정비를 위한 세종시 주도의 논의가 필요

- 국가상징구역 내 한글 관련 거점은 '한글산업클러스터'보다 '국립 한글문화단지' 또는 '한글 문화단지' 개념으로 일원화할 필요
  - 한글을 산업 기능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교육, 체험, 전시, 관광, 연구, 콘텐츠를 포괄하는 국가적 문화자산으로 재정립할 필요
- 국립 한글문화단지를 세종시 한글도시 정책의 상징 거점이자 중장기 핵심 플랫폼으로 설정하고, 국가상징구역 구상과의 연계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
  - 이를 위해 시 차원의 정책 메시지와 관계기관 협의 방향을 국립 한글문화단지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

#### ❖ 복합문화거점 시설과 생활권 정책을 연결하는 시민 체감형 사업 확대

-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한글도시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사업과 한글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조치원 한글놀이터는 체험·교육 거점, 나성동 한글상점은 생활문화·소비 거점, 한글사랑거리와 이응다리는 경관·관광 거점으로 기능을 특화할 필요
  - 어린이·청소년·가족 대상 한글 체험교육, 학교 연계 프로그램, 생활권 기반 한글문화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 기반을 강화할 필요
- 각 자산을 단순 개별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한글도시 정책 흐름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과 공통 홍보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이를 통해 대형 거점 구상이 완성되기 전에도 시민이 한글도시 세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출구전략 마련

-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한글 관련 정책이 일회성 사업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후속 추진체계 마련 필요
  - 문화도시 사업에서 추진한 한글 중심 프로그램과 성과를 국립 한글문화단지 구상, 기존 한글 문화자산 운영,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단년도 사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간, 프로그램, 브랜드, 시민 참여 체계를 연동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구조 마련 필요
  - 특히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세종시 고유 사업으로 유지·확장할 수 있는 핵심 사업군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내재화할 필요

#### ❖ 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 조성

- 세종시는 한글도시의 상징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상 공간에서 한글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도시 경관 조성 필요
  - 상업지역과 보행축을 중심으로 한글 간판 또는 한글 병기 간판 확산을 유도하고, 참여 업소에 대해 디자인 지원, 제작비 일부 지원, 우수업소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필요
- 나성동 상권, 조치원 중심가, 한글사랑거리 일대 등은 한글 친화형 언어경관 시범구역으로 검토 가능
  - 이는 한글의 표음성과 조형성을 도시경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일상 속에서 한글도시 세종을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

#### ❖ 기존 자산 연계 및 경험 설계 중심의 정책 전환

- 기존 한글문화자산을 연결하는 한글 산책길, 주제형 투어, 해설 콘텐츠, 모바일 안내체계 등 시민 체감형 경험 콘텐츠 개발 필요
  - 세종대왕 나신날 또는 한글날 전후 '세종 한글문화주간' 운영을 통해 한글문화자산 연계 행사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집중 운영 필요(\*현재 세종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도시 출범일의 의미가 중심인 만큼, 향후 한글도시 정체성과 시민 체감도를 함께 반영할 수 있는 상징체계 연계 방안 검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세종시민의 날과 한글 상징체계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하여 한글도시 세종의 상징성과 시민 체감도를 함께 높일 필요
  - 대학, 청년, 지역 창작자와 협력한 한글 기반 도시디자인 및 생활문화 실험사업을 추진하여 한글도시 정책의 참여성과 확장성 제고 필요

#### ❖ 세종형 한글도시 브랜드 전략 강화

- 국립 한글문화단지, 기존 한글문화자산,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을 하나의 정책 서사와 도시 브랜드로 연결할 필요
  - 한글도시 세종의 정책 이미지를 상징 조성, 생활문화, 관광, 교육, 콘텐츠가 결합된 복합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
  - 이를 통해 세종시 한글정책이 개별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문화정책을 통합하는 대표 전략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

▶ 세종시는 국립 한글문화단지 중심의 정책 개념을 정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한글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생활권 정책과 도시경관 조성을 병행하며,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세종형 한글문화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 세종의 활성화된 독서문화를 '집필문화'로 승화시키는 한편, 세종시민의 삶을 아카이브화하는 사업 추진
- 신도시 세종의 특성상 체계적인 생활사 기록이 부재한 측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공간의 문화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독서·집필문화 거점을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독립서점 등으로 확장해 로컬 상권 활성화의 계기로 설정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천영준 책임연구위원    chyj12241@sri.re.kr

문화복지

## 1 정부 및 타 시도 동향

- ❖ 교육부·독서국가추진위(위원장 : 김영호 국회의원)는 '책읽는학교·책읽는마을·책읽는도시' 비전 선포(26.01.25)
  - 디지털대응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 학교현장의 독서인프라 지원을 통해 AI시대 인문기초·인성교육 방안 제시
    - '수업중심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독서를 학교문화로 정착
    - 맞춤형 독서교육, 진로연계 독서멘토링, 유아기 독서교육 지원 등 강조
- ❖ 문화체육관광부 '독서기반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발표(25.7.3)
  - 지역사회 접점(도서관, 서점, 학교, 출판사, 생활문화시설) 통한 독서 종합지원 및 비독자의 독자 전환 장려
    - 북스테이·독서투어·오프라인 독서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독서'의 활성화
    - 지역산업·문화자원을 활용한 북큐레이션 서비스, 독서 통한 도시브랜드 구축 등의 포괄적 지원
- ❖ 서울시교육청·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학생·교원·가족 등 공동체 차원에서 직접 책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책쓰기 문화' 활성화 중
  - 서울시교육청, 학교·가정까지 확대한 책만들기 사업 운영
    - '가족 책 만들기'(가족·학생 공저자되기, 24년 시작)을 통한 독서·인문교육 체계화
    - \* 책이랑 놀고(초), 책을 쓰고(중), 책으로 함께 성장하는(고) 융합 과정

SEJONG  
ISSUE  
REPORT

- 디지털 작가학교(교원대상), 박사·연구자와 함께하는 책쓰기 등 진행
- 단위학교에서만 진행된 독서·토론·글쓰기를 사회 차원으로 확대
- '책쓰는 도시 광주(光州)'
- 광주 이야기를 집필하는 '시민작가' 운영(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 글쓰기 워크숍, 전문가 1:1 코칭 등 전문 집필 및 출판을 위한 콘텐츠 구축

▶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책읽기' 장려 프로그램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책쓰기' 장려 프로그램 사이의 시너지 요소에 기반한 정책 설계 절실

## II 세종시 여건

### ❖ 현황

- 세종시의 독서 기반은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편임
  - 국민독서실태조사(21)에 따르면 세종시 독서율(수험서 등 제외)은 성인 50.5%, 학생 100%로 전국 평균(성인 47.5%, 학생 91.4%)보다 높은 편
  - 인구 25% 가량인 9만 6,829명이 공공도서관 회원 \* 1관당 14만 9천 건 대출
  - 국립세종도서관·시립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총 90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
  - 읍면동(20개) 국립도서관 통합회원증·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등

### ❖ 시 산하의 한글사랑 책문화센터가 운영 중이나 홍보·실질화 어려운 상황

- 시 청사내 핵심공간에 독서·출판 연계진흥을 위한 책문화센터가 운영 중이나, 주말 휴관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운 상황
- 책쓰기 강의 프로그램의 경우 성공한 출판 경험을 지닌 강사·제작자·디자이너 초빙 등을 통한 시민 효능감 제고 필요

## III 해결방안, 활용방안, 개선방안, 세부계획

### ❖ (제안) 지역 거점별 책읽기·책쓰기 진흥 프로그램 시행

- 지원 방향
  - 공공 중심의 독서·집필 문화 프로그램을 읍·면·동 거점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쉽게 '세종시민의 삶 아카이브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자서전형, 지역공동체형(협업 기반 창작), 전문가형(지식·심화 콘텐츠)으로 다변화
  - 체계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예산지원을 위해 세종시 대학 RISE사업과 연계
  - 우수 콘텐츠(출판물)는 시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시민작가'로 포상

### ❖ 책읽기·책쓰기 진흥 거점으로 지역 독립서점 활용

- 지원 방향
  - 베이징(北京) 단향공간(單向空間), 뉴욕 맥널리 잭슨(Mcnally Jackson)과 같이 독자·저자·

출판사가 네트워크화되는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독립서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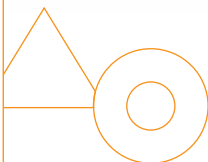
\* 맥널리 잭슨은 '나의 책, 나만의 책'(Espresso Book Machine)을 통해 소량출판 지원

- 이용빈도가 높은 독립서점은 각 지역 상가시설의 앵커 테넌트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책읽기·책쓰기 프로그램을 체계화한 독립서점을 세종시의 공간 브랜드로 정립
- 독립서점에서 여민전으로 구매한 책을 4주 내에 읽고 공공도서관에 기부할 경우 같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 등으로 활성화 검토

\* (예) 울산 '책값돌려주기'사업

## Ⅳ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 ❖ 책읽기·책쓰기 진흥정책을 통한 세종시민의 자아실현·행복도 제고 및 생활사 기록 축적
- ❖ 세종시 특유의 독서 역량을 활용한 책읽기·책쓰기 커리큘럼 구축, 특화공간 개발로 로컬브랜드 정립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



## 세종한글미술관의 목표·방향 전환

- 정형화된 미술관이 아닌 공유문화공간으로서의 방향 전환 제안

문화복지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천영준 책임연구위원   chyj12241@sri.re.kr

### ❶ 이슈 제안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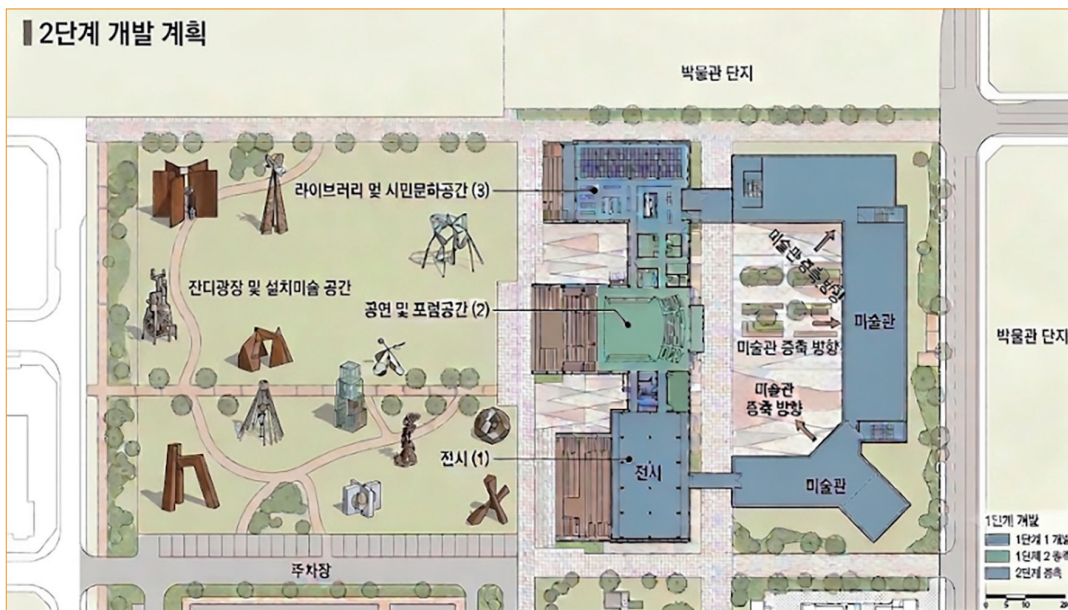
#### ❖ 세종한글미술관 방향 재설정의 필요성

- (세종한글미술관의 장점) 세종시내 정원 속 미술관이라는 참신한 구성으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 세종중앙공원 관리사업소 건물 3개동(건물 연면적887m<sup>2</sup>)를 리모델링해 구축
- (정형화된 미술관으로는 한계 존재) 타 시도 미술관 대비 협소한 연면적(900m<sup>2</sup>), 충분한 수장고 및 학예 조직 등의 구축 여부 등이 향후 과제가 될 수 있음
  - \* 대구시립(21,701m<sup>2</sup>), 부산시립(21,506m<sup>2</sup>), 광주시립(18,172m<sup>2</sup>), 서울시립(13,433m<sup>2</sup>) 등에 비해 협소
- (강소문화시설로서의 가치 재설정)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풍부한 콘텐츠·고품질의 시민 참여 기회 등으로 보완하고, 미술 수집·전시 등에 국한되지 않는 다원적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
  - \* 국립현대미술관 내 다원예술공간, 리움(LEEUM) 아이디어뮤지엄 등의 사례 참고 필요
- (행정수도 세종의 민주적 정체성 표출) 세종대왕·한국학 등 전통적 이미지에 치중하지 않고, 세종시의 민주주의적·개방적 정체성에 알맞은 콘텐츠와 함께 한글의 현대적·창의적 해석을 유도할 수 있는 예술적 구현 계획 절실
  - \* 한글은 의미·소리·기호가 일체화된 문자로 상형성·음성학적 과학성을 담보한 문자로 백남준 등의 현대예술가가 드로잉·비디오아트 콘텐츠로 형상화한 사례가 다양함

## II 중앙공원 공유문화공간의 의미

### ❖ (가칭) 중앙공원 공유문화공간 개요

- (건축·공간의 장소특수성 강조) 건축과 미술이 창의적으로 융합된 장소 특수적 설치미술·미디어작품 배치를 통해 기성 시립미술관과 다른 예술적 경험 요소를 적극 부각
- (전시·공연·라이브러리 융복합 라키비움) 다양한 기능의 효과적 탑재를 통해 시민들의 융복합적 문화예술 경험이 가능한 대안공간·라키비움 형태 자리매김
  - 한글 글꼴 및 타이포그래피 예술의 가치를 담은 중·소규모 공유문화공간 구상
  - 세종예술의 전당·세종문화예술회관·갤러리 실(室)·조치원 1927 아트센터 등 관내 기존 문화 시설과 목적·방향 측면에서 차별화
  - 공유문화공간의 가치를 홍보·브랜드화할 수 있는 강연·이벤트 콘텐츠화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 마련
- \* 공간 속성에 맞는 문인·미술가·연주자 등의 대중 소통 공간 등으로 적극 활용  
(예) 박창수 예술감독(작곡가·피아니스트)의 '더하우스콘서트' 등 참고
- (점진적 공간 개발) 1단계(현 계획 수정) 중앙공원 공유문화공간(①전시, ②공연 및 포럼 공간, ③라이브러리·시민공간), 2단계(미술관)로 나눠 증축개발 검토



## III 해외 참고 사례

### ❖ 공유문화공간 형태 예술시설의 해외 사례

- (프랑스 퐁피두센터) 국립문화예술센터로서 기능하며 대통령 기념·역사시설로서도 자리매김. 현대미술관·도서관·공연장·음악연구소 융복합 운영
  - 개관(1977.1.31.) 이후 현대미술 분야에서 큰 인지도를 얻어 프랑스 메츠·스페인 말라가·중국 상하이·한국 서울 등에 분관(分館) 형태로 개관

- 베이컨(F.Bacon), 칸딘스키(B.Kandinsky) 등의 작품 다수 소장
- 이후 퐁피두센터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내에서는 미테랑(Mitterrand) 국립도서관, 케 브랑리-자크 시라크 박물관(비서구 예술 특화) 등의 문화예술시설이 건립된 바 있음
- (나기초 현대미술관) 건축계 거장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2019년 프리츠커상 수상)가 설계한 곳으로 일본 당대 전위예술가들을 3개의 설치작업으로 기념하는 시설이자 공공 커뮤니티 허브임(94년 개관)
  - 세종한글미술관 건립 구상과 유사하게 소규모의 연면적(2,262.15m<sup>2</sup>,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으로 지어진 공간임
  - 나기초(奈義町) 특유의 자연경관(나기산)과 우주적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전위예술가 아라카와 슈사쿠·매들린 긴즈(작품명 태양), 오카자키 가즈오(작품명 달), 미야와키 아키코(작품명 대지)를 기념하는 공간으로 구성
    - \* 작은 시골마을에 위치해 있으나 내부에 나기초 도서관(Town Library), 주민들을 위한 기획갤러리, 카페 테라스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공간
- (독일 쿤스트하우스 드레스덴) 정형화된 시립미술관 형태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공공공간(광장·공원·수변공간)을 활용한 설치·퍼포먼스·강연 콘텐츠 구현
  - 독일 내 타 도시 쿤스트하우스는(베를린, 함부르크) 민간 중심의 실험 예술형 사례인 반면, 드레스덴은 지자체 정책 기반으로 글로벌 수준급 예술가·지역 예술계 등과 상호작용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
    - \* 2017년 시리아 작가 할부니(M. Halbuni)와 협업한 反戰 주제의 <모뉴먼트> 프로젝트, 예술가의 작업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Research and Share 프로젝트 등 구현
  - 난민·환경생태·평화 등 대안적 주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전시 중임

#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 세종

- 우수한 체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 증가
- 세종시가 주도하여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필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김성표 책임연구위원      spkim@sri.re.kr

문화복지

## Ⅰ 국정 동향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국정과제 106번)'에는 전문체육 투자 확대를 위해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추진 포함

- 국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중
  - 주요 내용 : 제14조의5(체육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체육영재를 교육하기 위하여 신체적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체육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학생선수의 감소와 학생선수 육성 한계
  - 학생선수는 '15년 30,783명에서 '26년 27,510명으로 3,273명 감소
  - 체육계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선수 감소, 기초종목 중심의 운동부 운영, 수도권 편중 등으로 우수한 학생 선수 선발과 육성에 어려움
  - 학생선수들은 일반 교육과정 참여에 대한 부담, 학업과 훈련 간의 불균형 문제 발생
  - 학생선수 감소에 대비하고, 기존의 학생선수 육성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생선수 육성체계 마련 필요

### ▶ 2024년 문체부 용역 결과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최적지로 세종시 선정

- 국정 방향은 '우수한 체육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 증가

SEJONG  
ISSUE  
REPORT

## II 세종시 여건

### ❖ 현황 및 문제

-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체육계 중·고등학교가 설립·운영 중임 (제주에는 일반고인 남녕고에서 학생선수를 선발하고 육성 중)
- 2026년 기준 전체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 2,728개 중 세종시는 약 1.21%(33개교)를 차지하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 2026년 기준 전체 학생선수(중학교, 고등학교, 국제학교) 27,510명 중 세종시는 약 0.5%(136명)를 차지하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 2025년 기준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5개 운동 종목은 세종시 내 '초등-중등-고등'으로 이어지는 연계 진학이 가능한 상황
- 하지만, 5가지 운동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수영, 태권도, 세팍타크로, 축구, 탁구, 펜싱)은 세종시 내에서 연계 진학이 불가능한 상황

## III 해결방안, 활용방안, 개선방안, 세부계획

### ❖ (제안) 세종시에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 문체부 소관, 독자적인 운영으로 글로벌 체육 영재 양성을 위한 학교 운영, 스포츠과학 장비 및 훈련시스템과 국가차원의 육성체계 구축 가능
- (장점) 지역체육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신설 타당성 확보 가능, 세종스포츠과학센터 신규 설립 등 문체부의 적극적 역할 가능
- (단점) 국립영재학교 신설 사례가 없어 공모대상 및 응모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한국과학 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로 신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공립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허용)
- (고려사항)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종목, 국제대회 참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기존 체육계 학교와 차별화된 인재상 제시 중요

## IV 정책 제언 및 기대효과

- ❖ 세종시에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국가 차원의 우수 체육인재 육성 기반 마련, 지역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인재유출 방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PART



세종 이슈리포트  
통권 제1호

# 균형성장

SEJONG ISSUE REPORT

# '묻는 장례'를 넘어, 자연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이별 산분장 제도 도입과 미래 장례문화의 전환

- 산분장: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현대적 장례 문화를 정립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이자은 책임연구위원 jaani@sri.re.kr

## ❶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 장사제도 패러다임 전환(국가 정책 변화)

- 2024.1.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5.1.24. 시행)으로 산분장 제도 본격 도입
- 산분장은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자연(해양·시설 등)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자연장의 한 유형으로 제도화됨
  - \* “매장 → 화장 → 봉안” 중심 구조에서 → “자연 환원형 장사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 정부는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약 3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단순 제도 도입이 아니라, 봉안시설 포화 대응 및 국토 효율화 정책 수단으로 활용

### ❖ 장례문화 및 사회 인식 변화

- 산분장 선호도 증가 : 22.6%(23년) → 23.8%(25년), 50대(26.1%), 30대 (24.4%)  
순서로 높게 나타남

| 구분    | 화장 후 봉안(납골)<br>시설에 안치 | 화장 후<br>자연장 | 화장 후 산, 강,<br>바다에 뿌림 | 매장(묘지) | 기타* |
|-------|-----------------------|-------------|----------------------|--------|-----|
| 2023년 | 35.2                  | 33.2        | 22.6                 | 8.5    | 0.6 |
| 2025년 | 36.5                  | 32.2        | 23.8                 | 6.8    | 0.7 |

자료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기타는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장례방법 외 모든 응답을 포함하는 항목, 풍장, 장례 미실시, 전통·종교적 장례 및 기타 비표준 장례 형태 등 포함

- 고령화·1인가구 증가, 사망자 증가, 장례 간소화 추세 확산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조문, 온라인 추모 등 → “디지털 기반 추모문화” 확산

▶ 시설 확충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요관리형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장사시설 구조 및 한계

- 세종시는 은하수공원을 중심으로 봉안·자연장 체계 운영 중임. 현재는 운영 가능 수준이나, 중장기적으로 봉안시설 포화(2031년 전후)예상
  - ※ 현재 은하수 공원(봉안당, 잔디장, 수목장) 이용률 85.1%, 잔여기수 8,496기
    - 조성 중인 잔디장, 수목장 고려하면 이용률 48.8%

### ❖ 도시 특성과 정책 적합성

- 세종시 은하수공원 내 현재 잔디장으로 조성 중인 부지를 일부 활용하여 산분장 시설을 도입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구조임

### ❖ 세종시는 고령인구 11.6%로 고령화사회이나, 2034년 초고령사회(20.8%) 진입\* 및 사망자 수(연 평균 1,372명(10년 간)) 증가 \* kosis 장래인구추계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향후계획) 단기: 제도 도입 및 기반구축(제도도입 + 수용성 확보)

- 산분장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 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한 국비 확보
- 은하수공원 내 산분장(대안1. 습식매개-회수형/ 대안2. 건식산분-토양피복형) 구역 조성 및 운영지침 마련
- 시민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 디지털 추모관(공간 + 디지털 결합) 구축 및 운영(온라인 추모, QR 연계 등)

### ❖ (향후계획) 중장기: 서비스 확산 및 모델 정착

- 디지털 추모관 고도화
  - AI·데이터 기반 추모서비스 확장 (AI가 고인 생애 자동 정리, 가족 맞춤 추모 콘텐츠 추천, 기일 알림 자동 제공, 데이터 기반 추모 기록 관리, 음성·영상 자동 정리)
- 타 지자체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 및 정책사례 구축

### ❖ (기대효과) 은하수공원 포화 대응 및 수요 분산

- 산분장은 토지 비점유형 장사방식으로 봉안시설 수요를 구조적으로 분산가능하며, 신규 봉안시설 확충 없이도 장사수요 대응 가능

### ❖ (기대효과) 시민 선택권 확대 및 장례문화 개선

- 다양한 장례방식 선택 가능, 고령화·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현실적 장례 제공

# 늘어나는 빈집, 달라지는 제도... 세종시가 준비해야 할 3가지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이자은 책임연구위원 jaani@sri.re.kr

## I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 법제도의 변화

- (중앙정부)빈집관련 특별법 제정·추진 → (세종)세종시 조례 및 빈집 관리체계 선제적 정비
  - 2026. 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하반기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가칭)」 제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종시 조례 및 빈집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법 시행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활용 및 지원 기반 확대 → (세종)공간단위 농촌빈집 활용 및 연계사업 추진
  - 안전에 위험한 빈집철거를 확대하는 동시에, 빈집을 지역활력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확대. 이에 대응하여 행정리 및 생활권 단위의 밀집구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 단위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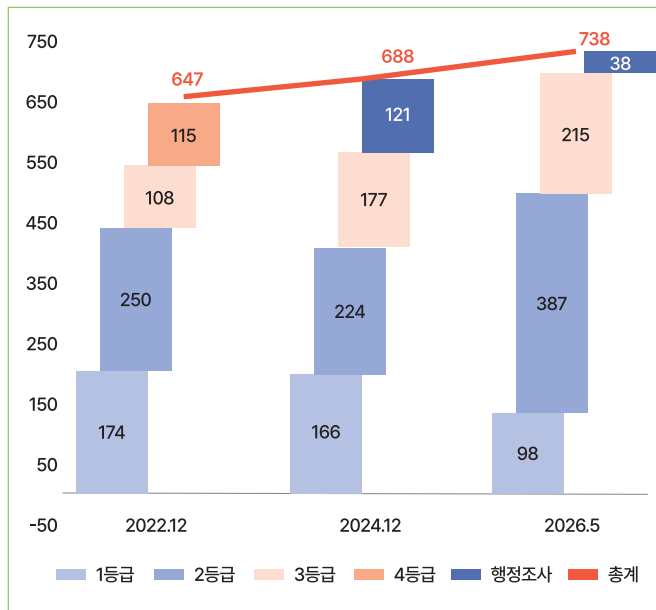
▶ 빈집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종시 선제적 대응 필요성 증가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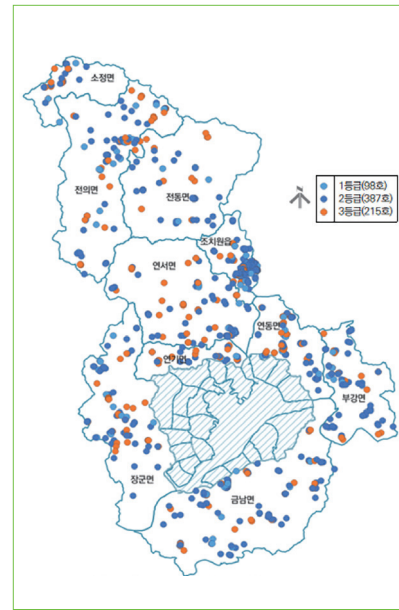
### ❖ 세종시 빈집의 증가

- 2026. 7월 기준, 세종시 빈집은 738호로 나타나며 22년 1차 실태조사 대비 14.1%(91호) 증가. 등급별로 살펴보면 가장 양호한 빈집인 1등급이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2등급은 약 61.6% 증가

- 철거·정비 속도가 빈집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관리대상 빈집이 누적되는 구조가 지속



[그림 1] 세종시 빈집현황 및 변화(2026.7)



[그림 2] 세종시 빈집 분포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향후계획) 1단계 : 빈집(빈건축물) 전담팀 설치

- 단순 실태조사와 정비사업을 넘어 “빈집/빈건축물”조사·관리, 정비 및 활용사업, 소유자 협의 및 행정조치, 자원 관리, 민간협력 및 지역활성화 사업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조직 필요
- ※ (사례)부산시-부산진구-건축관리과-빈집관리계(3명), 인천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빈집정비팀(4명)

#### ❖ (향후계획) 2단계 : 빈집기금 조성 및 운용

- 자원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 필요. 민간 참여 유도 및 빈집증가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빈집기금 조성 및 운용 요구
- ※ (사례)부산시 서구, 영도구, 중구, 인천시 미추홀구, 서울시 동대문구 등

#### ❖ (향후계획) 3단계 : 통합형(빈집+도시재생+농촌공간) 지원조직 구축

- 세종시는 빈집, 도시재생, 농촌공간정책이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구조로,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통합형 지원조직 구축(재단형) 필수

#### ❖ (기대효과) 빈집관리 모델을 구축

-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하여 국비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세종시의 빈집관리 모델을 구축 기대

#### ❖ (기대효과) 정주 환경 개선 등

- 빈집 조사-정비-활용-관리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생활인구 확대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전의묘목 생산기반을 활용한 북부권 조경·정원산업 진흥거점 조성

- 전의면은 조경수·묘목 생산기반과 세종묘목플랫폼, 조경수 묘목축제 등 지역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북부권 정원산업 거점으로 육성 가능
- 세종묘목플랫폼 활성화로 전의묘목 산업 기반을 강화, 향후 조경진흥단지 지정 추진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이윤희 책임연구위원 yhlee@sri.re.kr

### Ⅰ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 세종시는 전의면 일원의 묘목 생산기반과 세종묘목플랫폼을 활용하여 조경·정원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 보유

- 전의면은 조경수·묘목 생산기술과 생산능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세종전의조경수묘목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 기반을 형성
- 세종묘목플랫폼은 묘목 판매, 전시, 교육, 스마트팜 기술보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시설로, 단기적 활성화 효과가 기대

❖ 국토교통부는「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 제도\* 운영

\*조경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적하여 조경산업의 생산·유통·기술·교육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

- 2026년 현재 국내에 조경진흥단지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며, 전의묘목단지 지정 추진 시 국내 선도사례로서 정책적 상징성과 파급효과 기대

- ▶ 전의묘목단지를 단순 묘목 생산지가 아닌 유통, 품질관리, 기술교육, 정원문화 확산 기능을 갖춘 세종형 조경·정원산업 거점으로 육성 필요
- ▶ 조경진흥단지 지정은 중장기 제도화 과제로 추진하되, 우선 세종묘목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의묘목의 판매·유통·교육·브랜드 기능을 강화하고, 참여 농가 확대와 산업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

## II 세종시 현황 및 여건

### ❖ 현황 및 문제

- (전의묘목 생산기반 보유) 전의면 일원은 전국적인 조경수 묘목 생산지로서 묘목 발아기술, 생산 노하우, 생산농가 간 협력체계\* 보유  
\*세종전의묘목협동조합(48농가)에서 세종묘목플랫폼 위탁운영 중이며, 세종전의조경수묘목축제 개최
- (세종묘목플랫폼 조성) 전의면 읍내리 일원에 묘목 판매상가, 전시온실, 다목적 작업장, 스마트팜 연구실, 교육실 등을 갖춘 세종묘목플랫폼이 조성되어 판매·전시·교육·기술보급 기능 수행 가능  
\*현재 운영 과도기 단계
- (참여 농가 확대 필요) 현재 협동조합 참여 농가보다 미참여 농가가 더 많아, 플랫폼 활성화 및 향후 조경진흥단지 추진을 위해 전체 수요 파악 필요
- (유통·판매 인프라 고도화 필요) 기존 묘목 생산역량에 비해 유통지원시설, 물류체계, 온라인 판매, 공동브랜드, 품질인증, 이력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

## III 추진전략

### ❖ (단기) 세종묘목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전의묘목 산업기반 강화

- 세종묘목플랫폼을 핵심 앵커시설로 고도화하여 판매·전시·교육·품질관리·정보공유·기술보급·청년 창업지원 등의 기능 강화 및 공간 활용도 제고
- (가칭)전의묘목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논의 및 추진과제 도출(문제 진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 모색)

### ❖ (중장기) 조경진흥단지 지정 추진을 통한 북부권 조경·정원산업 거점화

- 단순 묘목 생산지가 아니라 조경수 생산, 조경소재 유통, 품질관리, 스마트재배, 기술교육, 정원문화 확산 기능을 포함하는 세종형 조경·정원산업 진흥거점으로 조성  
-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조경사업자 현황 조사(10개 업체 이상 필요), 참여기업 유치, 농가 조직화, 사업자 등록·법인화 지원 추진

## IV 정책 제언

- ❖ 북부권 조경·정원산업 진흥거점 조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세종묘목플랫폼 활성화(핵심 앵커시설로 고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연구 추진

#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세종형 국가 실증 도심 스마트팜」 육성 제안

- 스마트팜 교육·연구 테스트베드, 안정적 판로, 전문 인력육성을 결합한 국가 실증형 도심형 스마트팜을 통해 기후·탄소·스마트시티·복지정책을 연계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서환석 책임연구위원    hsseo@sri.re.kr

## Ⅰ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 기후변화로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기존 노지 중심 농업은 생산 안정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팜 도입 필요성이 확대
  - 스마트팜은 ICT·데이터 기반을 활용해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 청년·전문인력 유입과 소규모·고부가가치 작물 중심 운영이 가능
    -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하여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비 절감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4년 7월 제정)를 통해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 육성위원회 설치, 관련 기술 및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기반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를 운영(25.4)
  - 정부는 농산업 경쟁력과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7)
    - 농업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확산율을 30%로 끌어올리고, 2029년까지 온실의 35%를 스마트화하는 정책을 추진

- ▶ 기후변화로 기존 노지농업의 생산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기후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심형 스마트팜은 ICT·데이터 기반 지능형 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청년·전문인력 유입이 가능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현황 및 문제: 농업인 연령 고령화 지속 및 경지면적의 감소 가속화

- (농업인의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농 53.2%, 45세 미만의 청년농은 6.0%(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2024)
- (소농의 비중 확대) 0.5ha 미만의 소농이 전체 78.0%로 나타났으며, 2022년 대비 연평균 1.8% 증가 추세
- (농림어업의 비중 감소) 23년 지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 비중은 -7.8% 감소

### ❖ 세종시 정책여건 : 세종시는 행정수도이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ICT 기반 도시 인프라와 공공수요가 집적되어 국가 단위 실증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공공기관 밀집 및 공공급식 수요가 풍부하여 도심형 스마트팜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유리한 여건을 보유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제안) 기후위기·탄소중립·자원순환·스마트시티·복지정책을 연결하는 국가 실증형 세종 도심 스마트팜 육성

- (테스트 베드) 도심 스마트팜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 스마트팜 기술 및 소프트웨어 공동연구,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연계형)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체계를 연계한 안정적 판로체계 구축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등 생산과 수요를 연계한 판로체계 구축
- (인력육성) 스마트팜과 연계한 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재배·환경설비·데이터 분석 등 생산 기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물류·판로, 시민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스마트농업 융합 인력 양성
- (저탄소·자원순환 운영모델) 물 재이용, 에너지 절감형 설비, 폐열 활용, 유기성 자원 활용 등을 접목하여 스마트팜을 저탄소 도시관리 및 순환경제 실증모델로 육성
  - 옥상정원·수직농업 등 도심 공간과 연계하여 녹지공간 확충, 열섬현상 완화, 에너지 효율화 효과를 함께 검증

“폐기물에서 에너지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바이오가스 확대”

## 도심형 바이오가스·열병합사업 접목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화 정책 확대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추진 등 정책 본격화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으로 지역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이윤희 책임연구위원 yhllee@sri.re.kr

### Ⅰ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25~'30년 50%~'35년 60%~'50년 80% 설정(시행 25.1.1)

| 년 도 |    | '25~'30년 | '35년 | '40년 | '45년 | '50년 |
|-----|----|----------|------|------|------|------|
| 목표율 | 공공 | 50%      | 60%  | 70%  | 80%  | 80%  |
|     | 민간 | 10%      | 50%  | 60%  | 70%  | 80%  |

\* 법에서 5년 단위 생산목표율을 설정하고(시행령 제4조 별표1), 그 사이 생산목표율은 매년 고시로 지정

- ❖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기반하여 공공부문(발전外) 유상할당 조정계수를 기존 10% → 15%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역할

-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 문명 도약 토대 마련'을 제1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세종시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대응 필요

## II 세종시 현황 및 여건

### ❖ 현황 및 문제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미달성)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 미달성으로 과징금 예상  
\* 유기성 폐자원 :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미이용) 수북A/클린에너지센터 바이오가스 생산량 저조 및 '24년 기준 생산량의 49% 미이용\*  
\* 국내 하수처리장 평균 바이오가스 생산량 중 약 15% 미이용
-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증가) 세종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는 약 85%(해마다 감소 예정)이며, 사전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유상 구매 필요

## III 추진전략

### ❖ 도심형 바이오가스·열병합사업 접목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실증 Test-bed 제공

- 500k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리시스템의 실증 Test-bed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R&D 사업 기획보, 총 사업기간 '26년~'29년(263억원)/실증 '27년~(40억원 투입 예정)
  - (표준사업모델) 한국지역난방공사 : 저가열원 확보, 재생E 생산  
세종시: 바이오가스 안정적 처리 및 부가수익 창출
  - (기대효과) ①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부합 →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활용, ②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달성에 기여(과징금 부담 감소), ③ 전력 판매에 따른 경제적 이익(연간 약 9억원 추산/500kW급), ④ 실증사업 이후 기술 및 장비 기부채납 가능, 소화조 운영 기술진단 가능

## IV 정책 제언

- ❖ 바이오가스 연료 활용 기술개발사업 「500kW급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스템 국산화 및 지능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사업의 실증 Test-bed 제공 관련 MOU 체결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화 전략 구체화 필요

# 녹색 생활공간 확충 및 과학적 물관리 실현을 위한 「스마트 정원도시 융합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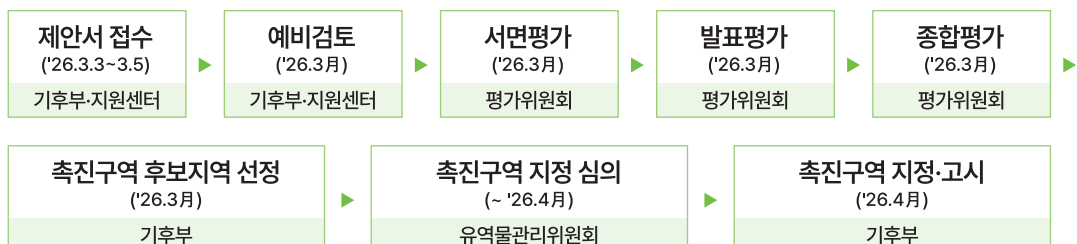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단순 수질 개선을 넘어, 홍수·가뭄 등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순환 활력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정책 추진

작성자 도시환경연구부 송양호 책임연구위원 ysong@sri.re.kr

## ❶ 제안 배경 및 국정 동향 시사점

❖ 최근(2025년) 시행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순환촉진법)」 및 제1차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2025~2026) 방침에 따라 물관리 정책이 '도시 전체가 물을 머금은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 '25년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 '26년 상반기 중 심의를 거쳐 4곳 내외의 선도 지구를 지정 예정
  - (통합 물관리 실현) 기존에 하수도, 하천, 도로로 쪼개져 있던 물관리 예산을 '물순환 촉진구역'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통합 지원함
  - (규제 혁파 및 패스트트랙)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인허가를 통합 심의,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특례 적용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검토)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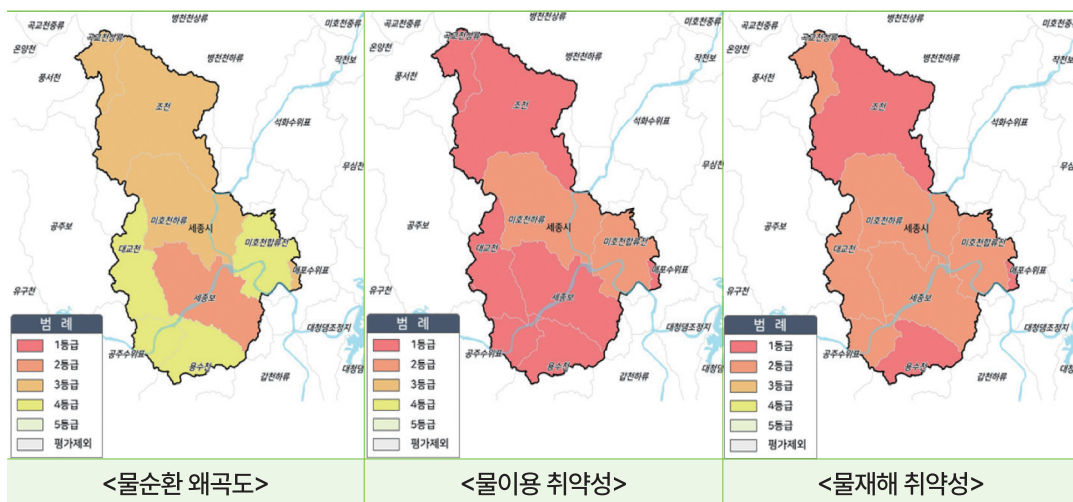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이 급증, 지하 시설 위주의 빗물 처리, 물리적 토목 공사 중심의 물관리 정책 등의 문제로 “세종시 전역은 1~2 등급(최우선/우선 관리지역)”임

▶ 국정 방향은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 및 기후 적응형 도시 구축’이며, 세종시는 국내 유일의 ‘환상형(Ring-shaped) 녹지 구조’와 설계 단계부터 도입된 ‘LID(저영향개발)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II 세종시 여건 및 분석 결과

### ❖ 현황 및 문제 : 높은 불투수율, 노후 하수관거, 수질 악화 문제 중첩

- (구도심의 심각성) 조치원읍의 경우 불투수면적률이 25%를 초과(32.6%)하여 물순환 상태가 ‘나쁨’으로 진단
- (행복도시의 높은 불투수율) 신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람동(63.6%), 어진동(61.9%), 종촌동(57.7%) 등 물순환 건전성 취약



## III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제안) 「스마트 정원도시 융합형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공모 추진

- (예산 전략) ‘정원 조성’ 예산은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나, ‘물순환 개선’ 예산은 국비 지원이 가능
- 예산의 명분을 치환하여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비가 오면 도시는 물을 머금고, 그 물은 다시 꽃을 피운다”는 순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을 설정

- (공간 전략) 물순환 촉진구역 사업의 핵심은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LID(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임
  - 이를 기술적 시설이 아닌 '조경 디자인(Amenity)'으로 해석하여 도시 곳곳에 소규모 정원의 확산이 가능함

| 평가 요소 | 정부 요구 사항                       | 세종시 대응 논리                                              |
|-------|--------------------------------|--------------------------------------------------------|
| 취약성   | 물순환 왜곡도 및 취약성<br>평가 1~2등급지역 우선 | "세종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전역이 1~2등급 상태임.<br>즉, 국가 지원이 가장 시급한 곳임." |
| 연계성   | 도시계획 및 타 사업과의<br>연계 여부         | "정원도시 여건 및 스마트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br>투입 예산 대비 효과 극대화 가능."    |
| 실행력   | 주민 참여 및 유지관리<br>계획의 구체성        | "시민 가드너 제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br>거버넌스가 이미 구축되어 있음."       |

PART



세종 이슈리포트  
통권 제1호

# 시민참여

SEJONG ISSUE REPORT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민자치 제도화 방향 모색

- ‘지방자치법’개정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8차 개정에 맞춰  
주민자치회 제도변화 대응 필요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myutos78@sri.re.kr

## I 이슈 제안 배경

### ❖ 현 정부 국정과제: 주민주도의 지방민주주의 구현

- 국정과제 52번인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지역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확장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자치’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제도 변화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앞두고 있음
- 특히 개정안 내 제17조의2 신설을 통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한 것은 시범사업 단계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 다만, 2023년 개정된 표준조례안에 대해 현장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충분한 공론화와 소통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 ❖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8차 참고조례 개정의 과제

- 현행 7차 주민자치 참고조례 체계 하의 운영 방식에서, 주민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인 제8차 참고조례 개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II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동향

❖ 세종시 주민자치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관내 24개 읍·면·동 전역에 주민자치회 설치 및 전면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제7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7차 개정안 주민자치회 조례분석 사항]

|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조항     |             | 변경(전)    | 변경(후) |
|------|----------|--------------------|----------|--------|-------------|----------|-------|
| 제6조  | 주민자치회 정수 | 최소30명 이상           | 00명 이내   | 제14조의3 | 자치(마을) 계획   | 의무수립     | 임의수립  |
| 제7조  | 위원의 자격   | 없음                 | 1년 이상 거주 | 제21조   |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 법인·단체 지원 | 삭제    |
|      |          | 사업장 종사자·기관 임직원·외국인 | 삭제       |        |             | 없음       | 교육 지원 |
| 제9조  | 위원의 선정   | 공개추첨               | 추첨·선출    | 제22조의2 | 정보공개        | 없음       | 정보공개  |
|      |          | 사전교육               | 삭제       |        |             |          |       |
| 10조  | 위원선정 위원회 | 없음                 | 설치       | 제23조   | 감독          | 없음       | 법률 준수 |
| 제12조 | 간사·사무국   | 사무처리               | 삭제       | 제25조   | 운영세칙        | 없음       | 정보공개  |
|      |          | 보조인력               | 삭제       |        |             |          |       |
|      |          | 실비·수당 지급           | 삭제       |        |             |          |       |

### ❖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

#### • 제1장 총칙

- 제1조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 조문 신설 반영, 제5조 기능에서 자치(마을)계획, 자치계획으로, 공동체 활동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통일, 협의기능 및 수탁기능 명확화

#### •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위원선정 방식 검토(공개모집 공개추첨, 단체추천을 통한 추첨),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신설, 제14조의 2~3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방식 개편, 제18조 위원임기 개편(예, 2년 혹은 3년으로 2회 연임, 농촌지역은 별도 자율구성)

#### •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4장 보칙 등

- 제20조 위원회의 해촉사유 추가,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주민세 부분), 대표적 참여기구로서 협력 노력 부분, 제25조 홍보 물품 등 제공, 제26조 연계법인, 제28조 운영세칙 등 보완

### Ⅲ 향후 계획 및 제안

#### ❖ 법적 근거 명확화 및 자치권 확립(제1장 총칙 대응)

- 신설 법조항의 신속한 반영: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신설에 맞춰 시 조례의 법적 근거를 재정비
  - 단순한 '시범실시'를 넘어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완전히 해소
- 기능의 체계적 정립: 자치계획의 명칭을 '자치계획'으로 통일하고, 읍·면·동 단위의 행정협의 및 수탁 기능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게끔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함

#### ❖ 주민주도의 자율적 구성권 보장 (제2장 구성 및 운영 대응)

- 위원선정 방식의 다변화: 7차 개정의 '추천·선출' 방식을 넘어, 공개모집 기반의 공개추첨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풀뿌리 조직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단체 추천제를 병행 검토
- 행정 지원 체계(사무국) 복원: 7차에서 삭제된 사무국 및 간사 지원체계를 제8차 개정안에 맞춰 검토
  - 주민자치회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간사)에 대한 실비 보상 및 보조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회의 행정 지속성 확보 필요
- 지역별 차등 임기제 도입: 세종시의 특성상 동 지역과 읍·면(농촌) 지역의 인적 자원 환경이 다른 점 인식 반영
  - 농촌 지역의 경우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자율 구성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지역별 맞춤형 운영을 지원해야함(세종시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

#### ❖ 실질적 자치 재원 및 협력 체계 강화 (제3·4장 관계 및 보칙 대응)

-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주민세 환원): 제21조 지원조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서 징수된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는 실질적인 재정 지원 모델을 공고히 해야 함(세종시는 현재 이를 잘 유지), 향후 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제도화 필요
- 해촉 사유의 구체화 및 투명성: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추가하여 자치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되, 운영세칙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감독과 주민의 감시가 조화를 이루는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조문 변경(안)

[7차~8차 개정안 주민자치회 조례분석 사항](현재 검토 사항)

| 구 분    | 현 행                        | 구 분  | 개 선 안                      |
|--------|----------------------------|------|----------------------------|
|        | <b>제1장 총칙</b>              |      | <b>제1장 총칙</b>              |
| 제1조    | 목적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정의                         | 제2조  | 정의                         |
| 제3조    | 운영원칙                       | 제3조  | 운영원칙                       |
| 제4조    | 설치 등                       | 제4조  | 설치 등                       |
| 제5조    | 기능                         | 제5조  | 기능                         |
|        | <b>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b> |      | <b>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b> |
| 제6조    | 주민자치회 정수                   | 제6조  | 위원정수                       |
| 제7조    | 위원의 자격                     | 제7조  | 위원의 자격                     |
| 제8조    | 권한(삭제)                     | 제8조  | 위원의 선정                     |
| 제9조    | 위원의 선정                     | 제9조  | 위원의 임기                     |
| 제10조   | 위원선정위원회                    | 제10조 | 위원의 대우                     |
| 제11조   | 주민자치회의의 장                  | 제11조 | 위원의 의무(정치적 중립 포함)          |
| 제12조   | 간사 또는 사무국(삭제)              | 제12조 | 위원의 해촉                     |
| 제13조   | 감사                         | 제13조 | 주민자치회의의 장                  |
| 제14조   | 분과위원회                      | 제14조 | 회의 등                       |
| 제14조의2 | 주민총회                       | 제15조 | 간사 또는 사무국                  |
| 제14조의3 |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 제16조 | 감사                         |
| 제15조   | 운영                         | 제17조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        | <b>제3장 주민자치회의의 위원</b>      | 제18조 | 주민총회                       |
| 제16조   | 위원의 의무                     | 제19조 | 자치계획의 구성 등                 |
| 제17조   | 정치적 중립                     |      | -                          |
| 제18조   | 위원의 임기                     |      | -                          |
| 제19조   | 위원의 대우                     |      | -                          |
| 제20조   | 위원의 해촉                     |      | -                          |
|        | <b>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b>   |      | <b>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b>   |
|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 제22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제21조 |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
| 제22조의2 | 정보공개                       | 제22조 | 정보공개                       |
|        | <b>제5장 보칙</b>              |      | <b>제4장 보칙</b>              |
| 제23조   | 감독                         | 제23조 | 감독                         |
| 제24조   | 보험                         | 제24조 | 보험                         |
| 제25조   | 운영세칙                       | 제25조 |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
|        |                            | 제27조 | 연계법인 설립                    |
|        | -                          | 제28조 | 주민자치 협의체 및 운영세칙            |

# ‘주민선택형 읍·면·동장제 도입’ 검토

- ‘세종시 시정 5기’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도입 검토

시민참여

작성자     경제사회연구부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myutos78@sri.re.kr

## I 이슈 제안 배경

### ❖ 현 정부 국정과제: 주민선택형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 국정과제 52번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지역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제시함
- 이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선택형 읍·면·동장제(읍·면·동 주민추천제), 주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 확장을 통해 주민참여 기반의 실질적 자치 실현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 주민참여 기반 거버넌스 전환

- 이러한 정책기조는 읍·면·동 단위 행정을 단순한 집행조직이 아닌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회의 기능 강화는 주민 참여 제도 확장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성과 참여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기구로서,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등 주민참여형 인사제도의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해 주민자치회 법제화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추천제 제도화에도 긍정적 여건이 형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기능 강화 흐름은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일정 수준의 대표성과 참여성을 확보할 경우, 읍·면·동장 선임 과정에도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정당성이 강화됨

## II 세종 및 광주광역시 사례, 그리고 쟁점

### ❖ 전국 최초로 전체 읍면동에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 세종시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주민이 읍·면·동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형 인사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음
- 해당 제도는 주민심의위원회 구성, 면접·토론 평가, 주민투표 또는 평가결과 반영 등을 통해 후보자의 지역 이해도 및 정책역량을 검증한 후,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됨

### ❖ 현행 법적근거

- 법적 근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을 전제로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와 조직) 「지방공무원법」 제29조(임용권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전직시험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직위의 지정)에 근거

###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장 주민추천제 사례 및 쟁점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2014년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형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법적 정합성 및 행정권한 충돌 문제가 제기된바 있음
- 주요 법적 쟁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다면평가) 부분에서 나타났음
  - 주민추천제에서의 주민투표 결과 공개 및 활용 방식이 기존 인사평가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됨
  - 광산구는 주민추천제를 자치법규에 근거한 인사혁신 제도로 보며, 주민참여 확대 및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
- 반면 광주광역시는 감사 기능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 공개가 공무원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및 인사관리 기준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운영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함
-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권 해석 차이, 기존 인사관행과의 충돌, 평가결과 활용 범위의 불명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행정 갈등으로 확산됨

## III 향후 계획 및 제안

### ❖ 법적 정합성 확보

- 주민추천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보완적 인사절차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제 임용은 세종시장 유지, 주민추천은 비구속적(우선순위·복수추천) 구조로 설계. 주민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표준화,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명확화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검토 제안: 주민참여형 다면평가의 제도화를 위해 평가자 집단에 주민대표 및 주민자치회 등 지역 기반 참여 주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자 구성 및 운영의 세부 기준은 조례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인사 참여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주민자치회 기반 강화

- 주민추천제는 주민자치회 제도와 연계될 때 정책적 실효성이 극대화됨
-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 대표성과 참여성을 확보하는 기구로서, 주민추천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기반 후보자 평가 참여, 주민대표성 중심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 거버넌스형 인사참여 구조로 연계 설계가 필요함(세종시는 이미 설계된 바 있음)

#### ❖ 행정역량 강화 및 제도 안정성 확보

-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의 기능 및 권한 재설계가 병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자율성 확대, 주민참여예산 및 마을사업 연계 강화, 지역 갈등조정 및 협치 기능 강화
- 또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개입, 공정성 논란, 조직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함
  - 주민심의위원회 공개추첨 및 외부 참여 확대, 평가 절차 표준 매뉴얼 구축, 공무원 대상 제도 이해 교육 강화, 시범사업 기반 지속적 제도 개선

2025년 9월

2026년 7월

## 연구과제 목록

- 국가 저출생 통계지표의 세종시 적용과 과제
- 미래 박물관도시로서 세종시 브랜딩 구현을 위한 기본구상
- 세종 의과학 비즈니스 클러스터 기본구상 및 성장방안(로드맵) 연구
-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진흥을 위한 전략과 과제
- 세종시 교통패스(이음패스) 도입효과분석
- 세종시 농촌산업 고도화 방안: 복숭아 산업을 중심으로
- 세종시 생태관광 추진 방향과 전략
- 세종시 수변공간의 이·치수 조화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연구: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세종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세종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도출 연구
- 세종시 축제 기반 조성을 위한 평가모델 개발 연구
- 세종시 취약직종 근로자 현황 및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종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및 운영전략
-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 세종 물산업 생태계 비전 마련
- 공공가치에 의한 공동창출 관점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연구
- 데이터 경제 시대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안
- 법·제도화 과정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건축 정책 비교 연구
-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H-T-L 프레임워크 기반 미시적 취약성 분석
- 창의적 아이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개인형 이동수단 견인 원가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 빈집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세종시 대응전략 연구
- 세종시 은하수공원 내 산분장지 조성방안 연구
- 세종한글미술관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과 운영전략
-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 현황 분석
- 행정수도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구상: 공공기관 협력과 AI 윤리행정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 본 목록에 수록된 연구보고서는 세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s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종 이슈리포트

2026 창간호 | 통권 제1호

발 행 인 권영걸  
기획·총괄 최성은  
편 집 신성주  
발 행 일 2026년 8월  
발 행 처 세종연구원  
주 소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5층  
(대평동, SM메디컬센터)  
연 락 처 Tel. 044-550-3500  
Fax. 044-866-8552  
홈페이지 <https://sri.re.kr/>  
디 자 인 세종신진문화사

전자간행물 등록번호 세종, 사00020

『세종 이슈리포트』의 전자파일은 세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종 이슈리포트』에 수록된 내용은 각 연구자의 견해이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 SEJONG ISSUE REPORT

세종 이슈리포트



세종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5, 6층  
T. 044-550-3500 F. 044-866-8552  
[www.sri.re.kr](http://www.sri.re.kr)